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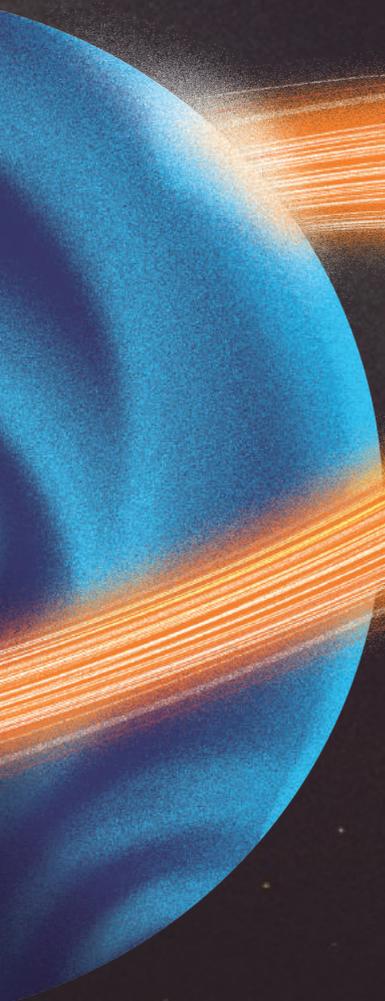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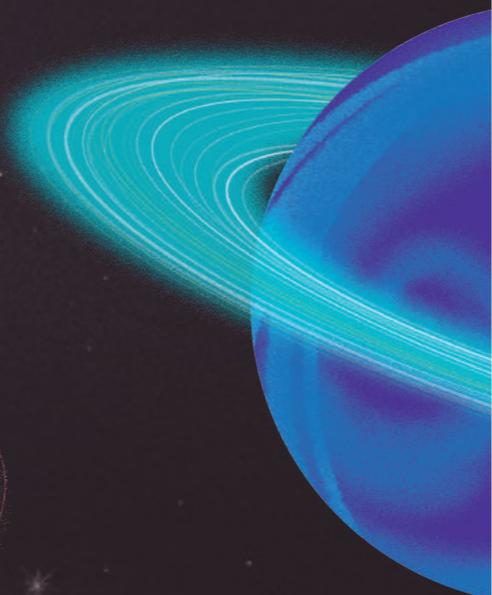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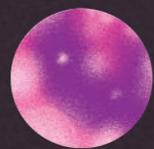
100만 가정의 생애파트너, LH가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전망 구축 노력으로
LH가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주택으로
국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 국민의 집걱정을 해결하는 생애파트너 임대/분양 등 약 300만 가구에 보금자리 제공(국내 총가구의 약 15%)
- | 도심과 지역을 재창조하는 개발플래너 16개 신도시, 세종시·혁신도시 등 서울시 면적 규모의 도시 개발
- | 국가의 재도약을 함께하는 경제서포터 판교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기반시설 개발



우주의 행성들은
자율주행을 합니다

지구는 시속 10만km로 달리지만
오차는 없어야 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깐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넘어
그 안의 생명까지 지키는 일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자율주행도
우주와 닮았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해 더 완벽하게

사람이 타고 있다

HYUNDAI
MOBIS



잘하는 것부터 혁신한다!

: IBK의 첫번째 혁신 [동반자금융]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지켜온 IBK기업은행이
더 능동적이고 더 창의적인 [동반자금융]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하겠습니다

- | | | |
|--|--|---|
| 01 성장금융 | 02 재도약금융 | 03 선순환금융 |
| Scale-up 금융 플랫폼
창업기업의 생존을 넘어
성공을 지원하는 성장금융 | Level-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재도약금융 | Cycle-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선순환금융 |

당신을 이롭게 금융을 혁신하다
Innovation Bank of Korea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어디대요?

이런 환상적인 곳
본적있나요?



궁금하다면! 가고싶다면!
365 핫플레이스 렛츠런파크!

※ 구매상한선 준수 건전한 여가생활의 시작입니다

"행복캡슐"

JW그룹이 세상의 건강한 미래를 담겠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걸어온 70여년.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신약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R&D 기술력과 생명존중의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미래를 행복캡슐 안에 담겠습니다.



JW 그룹

Healthy Future of Korea !

지난 50년간 (주)한국백신이 지켜온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입니다



커버스토리

“신상탈기 그만, 능력검증 인사청문회로”

10년 만에 공격과 수비, 창과 방패가 바뀌었다는 것뿐 달라진 게 없다. 인사청문회 얘기다.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더 엄격한 고위공직자 육성 및 검증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신상탈기식 검증이 아니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실현될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사회생활 자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상탈기 그만, 능력검증 인사청문회로



경실련 | 공동대표 박상기 선월몽산 김원배 김대래 중앙위원회의장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 양혁승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윤은주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7년 7월 18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CONTENTS

동승동 칼럼

12 인사 만사 혹은 망사? / 윤순철

특집

16 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바란다 / 권오인

19 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바란다 / 김성달

이슈리포트

22 ① 엄마, 우리가 먹는게 설마 GMO는 아니지? / 권태환

28 ②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적폐청산을 위한 8대 소비자정책 / 윤철한

시사포커스

32 ① 레일과 열차가 분리 운영하는 한국철도, 통합이 필요하다 / 최예지

35 ②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 정택수

38 ③ 사법개혁,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허재필

40 ④ 선거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유애지

42 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미친 집값 잡기에는 여전히 미흡 / 김성달

44 ⑥ 도시재생사업에 건설업체 참여 안돼 / 남은경

47 ⑦ 리베이트 근절 포기한 보건복지부? / 박지호



22 이슈리포트
기. 승. 전. GMO. 완전표시제



32 시사포커스
레일과 열차가 분리 운영하는 한국철도, 통합이 필요하다

현장스케치

50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 이성운

지역이야기

54 ① 본말이 전도된 광명도시공사 / 허정호

58 ② 청주시청사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 최윤정

통일마당

61 금강산 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조성훈

경실련 이야기

63 ① 회원 인터뷰 “나는 경실련 청소년 회원이다!” / 윤은주

66 ② 신입간사 3인 인터뷰 / 윤은주

73 ③ 해화동이야기 “책방이음” 인터뷰 / 윤은주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78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79 경실련 일일보고

80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50 현장스케치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63 경실련 이야기
회원 인터뷰
“나는 경실련 청소년 회원이다!”

인사 만사 혹은 망사?



역지사지는 없다. 인사청문회 얘기다. 10년 만에 공격과 수비, 창과 방패가 바뀌었다는 것뿐 달라진 게 없다. 국민들이 보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는 자조가 나올 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부와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다.

청문회의 기원은 1215년 영국의 미그나 카르타의 “당사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고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법적 청문이 도입되었다가 입법, 행정분야로 확대되었다. 인사청문회는 3권 분립이

엄격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선택한 국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직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권력분립, 비선출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 해당 직무에 보다 적합한 인재 검증,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1878년 미국의 연방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공직자 임명권을 대통령과 의회 중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하다가 대통령의 지명과 연방 상원의 인준으로 절충하여 도입되었다. 미국의 대통령은 약 6,000여명의 관료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연방 상원 임기 2년 회기동안 행정부 기구와 부처의 공직 등을 포함한 약 4,000명의 공직과 65,000명의 군인 임명에 관한 인준동의안을 제출한다. 대상자의 직위도 행정기구의 장, 국장 심지어 과장 급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장관급 후보자, 종신직인 대법관, 연방검사·판사, 행정부·군의 고위직 등 600명이 실질적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독재정부시절에는 고위직 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인사검증조직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학연, 지연, 정파적이거나 종교적 이해, 정치적 보상 등으로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냥 장관직에 앉히면 그만이었다. 물론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사정수석실이 인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는 공직비리 감찰을 통한 통제가 주목적이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1997년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공약하였고, 2000년 6월 제16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등 헌법에 국회동의권이 명시된 고위공직자 인선에 한해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하면서 도입되었고, 현재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 보직은 총 66개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총 30인 정도 이다. 김대중 정부 2인, 노무현 정부 6인, 이명박 정부 12인, 박근혜 정부 10인이었고, 그 사유는 부동산 투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 8건, 세금탈루 등 재산 부당 축재 8건, 논문표절 5건, 병역 비리 4건 등 순으로 대부분 도덕성 문제로 나타났다.

처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을 때 수십 년을 기득권층으로 지내다 야당이 된 한나라당에게 정권 흔들기의 좋은 소재가 되었다. 원래의 취지인 정책과 전문성 검증은 뒷전이였다.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병역이나 부동산 등 재산 축적의 문제, 세금탈루, 고학력자의 논문 표절문제 등 국민들의 공분 자극하는 소재로 등장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들 사이에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부도덕하게 사익을 취해 온 경우가 많았는데 짧은 기간에 허점을 찾아야 하는 청문위원이나 언론의 ‘신상털기식’ 인사검증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중대 부패범죄자,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를 제시하면서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는 “예수가 와도 통과 못 한다”는 기준의 엄격성이나 “뽕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다” 행위 원인의 차별성을 따져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대폭 손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는 국가의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들은 우리 사회가 십수 년에 걸쳐 길러낸 중요한 자원이다. 먼저, 우리는 인재 육성과 관리 시스템을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대통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로 지명되자 길목을 지키면서

신상을 털어 낙마시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로 진출하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정부윤리청(OGE, 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79명에 불과한 정부윤리청은 남북전쟁 당시 발생한 정부조달 비리 사건으로 이권개입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법’의 모태가 되는 연방 형법 제정 이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8년 ‘정부윤리법’에 따른 인사관리처 소속 부서로 출발하여 1989년 독립기관이 되었다. 정부윤리청은 미국 정부의 공직윤리 담당,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원,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공무원들이 외부 또는 직원들 간의 선물, 이권개입, 인사청탁, 직권남용 및 외부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들을 제시하고 감독한다. 특히 현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를 알아보는 상황이며 정부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하고, 퇴직자가 과거 담당했던 정부 업무와 관련해 현직 공무원과 접촉도 제한한다. 현재 우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고위공무원단체도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 확대해 정부윤리청으로 개편을 검토해볼만 하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의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 국회에 임명동의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하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약 30일로 하며 소관 청문위원회의 의결로서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 최대 약 45일 이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소관 청문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의 참여 없이 자체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앞에서 전술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10대 과제와 학력, 경력, 군경력 등을 검증하고 대통령비서실이 후보자를 검증한 인사자료도 국회 청문위원회에 제출을 의무화 하여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분석과 조사 등을 담당할 검증전문위원을 인사청문법 또는 국회사무처에 둘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토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소관 청문위원회는 지연되는 기간만큼 청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후보자 및 정부가 후보자에 관한 인사자료를 청문위원회에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혹을 키우는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자료제출 거부 시 그 사유를 외교군사 대북관계 등의 국가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직후보자가 청문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고의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답변 또는 청문 이후에라도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도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공직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고의적인 거짓 진술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로서 대통령에게 임명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통령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자료를 국회 청문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미국의 백악관은 후보자에게 개인정보진술서, 공직자인사관리 표준양식, 공직자윤리표준식 등의 서류를 제출받으면 이를 연방수사국(FBI)와 국세청(IRS), 정부윤리청에 넘겨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연방수사국은 기록을 토대로 공직자 및 주변 인물까지 포함하여 개인적, 공적 사항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검증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더 엄격한 고위공직자 육성 및 검증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신상 털기식 검증이 아니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실현될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사회생활 자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선봉장 역할을 해야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6월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16년 말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김상조 위원장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준사법기관으로 경쟁 촉진, 경제력 집중 억제,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재벌개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만으로는 힘들지만, 재벌정책 관련 대표적인 행정기관인 만큼 개혁 의지만 있다면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무엇보다 위원장의 의지와 흔들림 없는 실천이 중요한 만큼,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과 같은 단일한 접근으로는 재벌개혁 담보 어려워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후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들은 제시되지 않았고, 추상적인 내용만 언급했을 뿐, 7월 하순경에 업무방향 등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를 점검 중에 있으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를 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정도이다. 아울러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재벌개혁을 몰아치듯 하지 않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같은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4대 재벌을 만나서 재벌개혁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다고 했으며, 이후 23일 4대 재벌 경영진들과 실제

만남을 가졌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4대 재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일정의 제시,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공정위원장은 4대 재벌을 만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위, 기재부, 산자부 등의 부처와 국회를 포함한 추진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범 정부 부처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해야 할 제도개선 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공정위 조직 자체의 개혁도 병행해야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조사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인력충원 까지 언급했다. 공정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로펌에 간 퇴직 공무원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 공정위의 경우 그간 권한과 인력이 없어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니라, 개혁 의지 및 전문성의 부족,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컸다. 나아가 공정위 출신들이 로펌과 기업들에 재취업을 하여, 방패막이 역할과 로비 역할을 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소송 패소율도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위 자체의 개혁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행정 집행과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고, 공직자윤리법 대상에서 빠져있는 직원들의 재취업을 내부규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나아가 전문성과 상시적 감시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흔들림 없는 정책의 실천이 중요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창기에는 재벌개혁을 외쳤으나, 이 내 기업의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활성화'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계에 포섭되어, 결국 재벌 규제완화로 선회했다. 이로 인해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었다. 2015년 자산 규모 상위 10대 민간그룹의 매출은 1,001조5,580억원으로 동 기간 국내총생산(GDP) 1,558조원5,961억원의 64%에 달했다. 아울러 10대 그룹의 상장계열사

의 시가총액은 2017 3월 14일 기준 총 823조8,700억원으로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1,579조2,400억원의 52%를 차지했다. 이 두 수치가 보여주는 건 역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실패와 관련되어 있다. 공정위가 재벌정책의 대표적인 기관인 만큼, 김상조 위원장은 목표가 명확해 졌으면, 재벌의 로비와 저항에도 흔들림 없이 정책 실천을 해야 한다.

재벌개혁이란 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한정된 자원을 독차지하면서, 대대로 세습을 이어가고,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인 중소기업 이하 기업들을 쥐어짜기 식으로 어렵게 만든다. 재벌개혁은 한 곳에 자본이 쏠리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 선봉에 공정위가 있어야 한다. ☺☺☺



의원시절 개혁입법에 앞장서왔던 김현미 장관의 ‘따뜻한 주거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seongdal@ccej.or.kr

국토부의 첫 번째 여성장관이 탄생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후보자 내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직접시공제 확대 등 개혁적인 법안들을 다수 입법 발의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집값상승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및 노인가구 등의 대부분이 주거불안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며,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헬조선’은 진행중이다. 그러나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서울 등 일부지역에 대한 과열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미흡하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라며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6.19 대책을 투기세력에 대한 1차 경고 메시지라며 보다 강경한 대책 추진을 암시했다. 추가 대책에는 김현미 장관의 소신있는 개혁정책이 포함되길 바라며 다음의 과제를 제안한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2016년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건설투자는 11%가 증가하여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3.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3법 폐지, LTV·DTI 완화, 분양권전매 완화 등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의한 주택시장 과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 3년간의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으로 역대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불법전매 등을 통한 웃돈거래도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2016, 정동영의원). 이명박 정부도 경기활성화를 내세워 단군 이래 최대치인 22조원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30개 골프장 건설을 통한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우려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일자리 창출, 주거불안 해소, 도시재생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택시장 구조, 개발이익 환수미비, 건설업의 고질적 불법하도급 관행 등을 개혁하지 않은 채 매년 10조원을 투자 100곳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재생 뉴딜은 집값상승을 조장하고 부동산부자와 투기세력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부작용을 낳는 토건사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정책의 최우선은 집값안정 서민주거안정이며, 철저한 내수시장인 부동산시장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악용할 시 그 피해는 모두 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불평등 심화로 겪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 불확실한 미래 등 지불해야 할 대가가 더 크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취임이후 제과제는 집값거품 제거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며,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촛불광장이 요구한 ‘헬조선 탈출’의 핵심은 불평등과 주거불안 해소에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88년 이후 강남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10억원이 증가한 반면 노동자 연간소득은 2,500만원만 증가하여, 자산증가액이 소득보다 43배나 높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고는 격차 해소가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헬조선 탈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현미 장관이 취임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민주거안정의 핵심은 집값거품 제거와 주거불안 해소’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근본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거지원 2배 확대, 후분양제 이행,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과표현실화, 재개발재건축사업 개발이익환수 강화, 직접시공제 등 종합

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정책 추진에 대한 답변에서는 “검토” 또는 “단계적 도입” 등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이행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금융부담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공공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불분명했다. LTV·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대해서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며 제한적, 단계별 접근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전월세상한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근본대책을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한다면 지금의 주거불안은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과거 정부에서 말과 정책을 따로따로 추진하며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던 과오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뉴스테이 재검토 등 공공주택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즉각 이루어져 김현미장관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9월 오세훈 전 시장의 선언이후 서울내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을 10년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과 상관없이 장관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LH 공사의 모든 공공아파트에 적용가능하며, 장관의 개혁에 대한 진정성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 상한제, 임대등록 의무화 등 서민주거안정에 직결된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하며 서민주거불안을 방치해왔고, 첫 부동산 대책에도 소비자를 위한 정책개혁은 빠져있다. 따라서 김현미 장관이 집값거품제거와 주거지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지 않는다면 집값하락을 원치않는 관료와 건설업계, 부동산부자와 투기꾼 등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고 ‘따뜻한 주거정책’도 ‘투기방조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고 개혁 추진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

엄마, 우리가 먹는게 설마 GMO는 아니지?

– GMO 표시 실태조사 결과, 식료품 438개 제품 중 단 2개만 표시

권태환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dopj@ccej.or.kr

우리나라는 연간 1천만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이중 식용 GMO는 200만톤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GMO 섭취량은 약 40kg에 달한다. 필자는 지금껏 살면서 음식을 먹을 때 GMO 인지 명확히 따지고 섭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콩과 옥수수를 연간 약 40kg에 달하는 만큼 섭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많은 GMO는 어디로 간 것일까? 아니, 우리가 먹는 식품에 GMO 표시가 명확히 되고 있는 것이긴 한 걸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우리나라는 국민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및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용 GMO를 사용한 식품에 GMO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GMO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의 다소비, 기초식품 대부분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예외 조항으로 표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고,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GMO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적극적인 선택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당 고시안이 GMO 표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주장은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고, Non-GMO표시 기준 마련으로 시중 제품 중, GMO와 Non-GMO표시가 증가해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4개 단체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 개정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식약처의 주장대로 GMO와 Non-GMO표시가 확대되었는지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2017.06.21.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기자회견

438개 제품 중 GMO 표시는 수입제품 단 2개 뿐

GMO 표시 실태조사 대상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식료품 중 소비량이 많은 제품을 선정했다. 전체 438개 제품으로 과자류 168종(과자 62종, 팝콘 24종, 시리얼 59종, 빵 23종), 두부 13종, 두유 18종, 라면 36종, 식용유 23종, 액상과당 27종, 장류 123종, 통조림류 30종에 대해 GMO표시 실태를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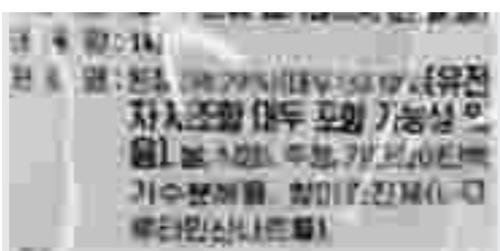
실태조사 결과, 438개 제품 중 실제 GMO표시가 된 제품은 시리얼 제품과 미소 제품 각각 1개씩 총 2개 제품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심지어 GMO표시가 된 시리얼 제품과 미소 제품은 수입제품이다. 국내 생산된 제품에서는 단 1건의 GMO표시를 발견할 수 없었다.

〈2017년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구분	세부 품목	조사 수량	GMO 표시
과자류	과자, 팝콘, 시리얼, 빵	168개	1개(시리얼 제품)
두부류	두부	13개	0개
두유류	두유	18개	0개
라면류	라면	36개	0개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유, 캐놀라유 등	23개	0개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요리당 등	27개	0개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123개	1개(미소 제품)
통조림류	참치, 콩치 등 생선 통조림	30개	0개
총계		438개	2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조사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GMO 표시 제품〉

시리얼 제품(수입)	미소 제품(수입)
	

지난 2014년에도 GMO 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다. 당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가 이번 실태조사와 똑같이 580개의 제품에 대해 GMO 및 Non-GMO 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다. 당시 시리얼 제품 1개에서만 GMO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GMO표시가 된 시리얼 제품 역시 수입제품이었고, 국내 생산 제품에서는 단 1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

〈2014년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구분	세부 품목	조사 수량	GMO 표시
과자류	과자, 팝콘, 시리얼, 빵	187개	1개(시리얼 제품)
두부류	두부	30개	0개
두유류	두유	50개	0개
라면류	라면	93개	0개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유, 캐놀라유 등	43개	0개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요리당 등	23개	0개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111개	0개
통조림류	참치, 콩치 등 생선 통조림	43개	0개
총계		580개	1개

*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조사

2014년에 이후 2017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 개정이 되었지만, 과거와 큰 차이 없는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고시 개정 이후 GMO 및 Non-GMO 표시 확대, 소비자 알 권리 강화와 같은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GMO표시제’ GMO 표시할 능력이 있는 건가?

우리나라는 GMO 의무표시제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GMO표시제가 실효성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행 GMO 표시는 GMO 단백질, DNA가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비의도적혼입치도 3%로 높아 면제 범위가 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용유, 간장류, 액상과당류는 모두 GMO로 만들었어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식품이다. 때문에 국내 수입되는 대부분의 GMO 콩은 식용유로, 대부분의 GMO 옥수수는 액상과당으로 가공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입되는 거의 대부분의 GMO작물이 표시 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중 제품 중 GMO표시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Non-GMO표시에는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아 생산자, 기업들이 표시하길 꺼려하는 상황이다. 얼마 전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GMO 검출 라면 관련 내용이 방송되었다. 해당 업체들은 비의도적혼입치 내에서 GMO가 검출된 것이라 해명했다.



판매순위	제조사	GMO 검출 여부	시험 횟수
1	A	GMO 옥수수 T25 검출	2회 시험 2회 검출
2	A	불검출	
3	A	GMO 콩 MON89788, GMO 옥수수 T25 검출	3회 시험 2회 검출
4	A	불검출	
5	B	GMO 콩 MON89788, RRS 검출	2회 시험 2회 검출
6	A	불검출	
7	A	불검출	
8	C	불검출	
9	D	불검출	
10	A	불검출	

▲2017.06.13. MBC PD수첩 'GMO 그리고 거짓말?' 방송 화면

GMO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식약처는 통관 과정에서 안전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국에 퍼진 것으로 확인된 미승인 GMO 유채 사건과 이번 라면 문제로 식약처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입 원재료는 국내산 원재료보다 많은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미 GMO 콩, GMO 옥수수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GMO의 비의도적혼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국내 농산물로 생산된 제품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Non-GMO 표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강원, 충남을 거쳐 경북, 전남 등 전국으로 확산된 미승인 GMO유채 문제를 보더라도 국내 농산물의 GMO 혼입은 현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표시 처벌을 감수하고 Non-GMO표시를 할 수 있는 국내 생산자는 없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산 콩, 옥수수를 사용한 제품에서 Non-GMO표시를 한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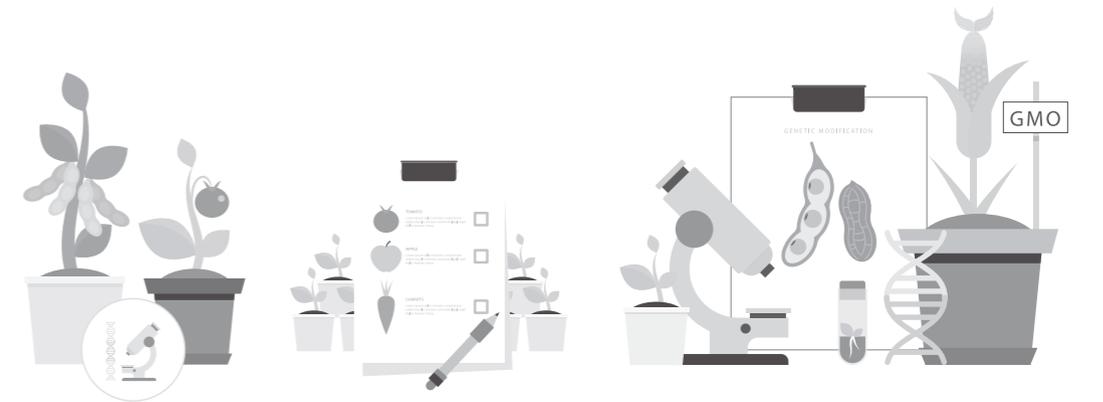
기. 승. 전. GMO 완전표시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GMO 안전성 여부를 떠나 GMO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쉬운 표시다. 2014년과 2017년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GMO 및 Non-GMO 표시가 표시기 기능을 상실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GMO 검출 라면, 미승인 GMO 유채 전국 확산 사태에서 확인된 것은 식약처와 대기업 같은 GMO 찬성론자들의 기만이 소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GMO가 안전하다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요구를 기피하기만 한다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GMO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현행 비의도적혼입치 3%를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0.9%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과 함께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약속했다.

이제 이 모든 열쇠는 국회와 식약처가 쥐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소비자가 GMO도 Non-GMO도 표시되지 않는 깜깜이 소비 속의 불안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소비자는 늘 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어느 것이 소비자를 위함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법 개정엔 당장 나서야 할 때이다.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적폐청산을 위한 8대 소비자정책

윤철한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raid1427@ccej.or.kr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2달이 지났다.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고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인수위원회를 꾸려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각종 국민 정책제안을 받고 있다.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19만 건이 육박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2일 국민인수위원회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했다. 제안하는 8대 소비자정책은 ① 집단소송법 제정 ② 징벌배상법 제정 ③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④ GMO완전표시제 도입 ⑤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⑥ 상품권법 제정 ⑦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⑧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이다. 8대 소비자정책과제는 그 동안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생의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실련이 제안한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바 있고,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와 자동차 교환·환불법 및 상품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한바 있다. 경실련이 제안한 8대 소비자정책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1. 집단소송제 도입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판매, 비용절감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장치 조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반복되는 가격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 발생에 따른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소비자, 환경, 노동,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대표당사자의 소송결과가 모든 피해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 효과가 있다.



2. 징벌배상제 도입

현행 손해배상제도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에 한정하다보니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하다.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징벌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처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법적 상한을 두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건 발생 후 피해처리까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소비자문제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닌 각 부처와 연관이 되어 있어 부처 간의 조율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행정조직체계로는 소비자문제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 피해 구제 등이 구조적으로 수행되기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업무를 별도 기구로 독립하여 소비자 업무 총괄 부처로 격상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조율이 가능하도록 정부 내 위상을 높여야 한다.

4. GMO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며,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천만 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GMO표시제도는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작 내가 먹는 식품에 GMO농산물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제도를 개정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바뀌어야 한다.

5.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자동차가 우리가 사는 것 중 집(주택) 다음으로 비싸다. 특히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불량자동차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과 관련된 엔진이나 조향·제동장치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결함 및 하자에 대해 명확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의 하자 및 결함 등 자동차 품질보증 관련 책임의 입증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제조사가 하도록 해야 하며, 중대한 하자는 단 1회만 발생해도 생명·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6. 상품권법 제정

1999년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이유로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매년 7조원 이상의 상품권이 발행된다. 특히 2016년에는 조폐공사를

통해 역대 최대의 9조 552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이는 화폐 발행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품권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품권 발행 및 법인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상환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품권법 재도입이 절실하다.

7.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 공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휴대폰·게임실명제 등 제도적·사회적 환경으로 소비자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분의 개인정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시 까다로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좀 더 쉽게 하고,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업무에 한정하고, 민간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8.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비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동통신 시장은 요금경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왔다. 미래부는 2005년 이후 단 한 번의 요금을 반려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등 요금인가 과정도 요식행위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성평가 시 제출된 자료를 공개해 요금인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미 서비스제공을 위해 투자한 통신망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요금에 반영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나아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이동통신3사가 독점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 ☺☺☺

레일과 열차가 분리 운영하는 한국철도, 통합이 필요하다

- 상하분리된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통합해야 -

최예지 경제정책팀 간사
cyj@ccej.or.kr



자료 : 코레일

철도 상하분리 무엇이 문제인가?

철도를 상부(운영)와 하부(시설)로 분리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시설관리와 유지보수 주체가 달라 안전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다. 유지보수는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의 몫이나, 열차운행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위해 코레일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모호한 책임 분산으로 안전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안전 책임의 모호함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분리는 비효율을 확대하고 기간관 갈등만 양산했다. 상하분리로 인해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했다. 상하분리 당시 코레일은 운영, 공단은 건설업무로 구분했으나, 현재 두 기관은 해외 사업, 시설관리, 부대사업, 경영지원, 자산관리, R&D 등 대부분 분야에서 기능과 인력이 중복되고 있다. 또한, 철도 부지 특성상 역사와 레일 부지 등을 통합 개발해야 하는데 운영과 건설이 따로 늘면서 개발성고가 미미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역보다 이용 인원은 1/5 수준이지만 크기는 5배로 건설된 '광명역'이 있다. 이처럼 철도의

조직 분리는 비효율을 확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철도의 기술력은 세계시장에서 점차 뒤쳐지고 있다. 철도는 선로와 역, 차량 등을 체계화하여 시스템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기반시설과 운영의 기술적 상호연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 철도 기술력 선진국들은 지주회사 또는 통합 그룹체제를 통해서 시설-운영-유지보수 간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기술 수준은 현재 최고기술 보유국인 독일 대비 83.1% 수준에 머문다. 이런 기술 격차는 연간 230조원의 대규모 철도시장에서 사업 수주를 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각국이 철도를 건설할 때는 토목, 운영 등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분리된 구조로는 세계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 초대형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철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상하통합은 필요하다.

세계적 흐름도 '통합'이다.

90년대 초반 유럽연합(EU)은 국가 간 자유로운 열차 이동이 가능한 '하나의 유럽'을 위해 철도 운영과 시설의 분리와 시장개방을 추진했다. 그러나 EU의 상하분리 지침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철도선진국은 통합형 철도산업을 유지하며, 철도산업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상하분리체제로 운영하다 부채증가, 열차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5년 통합체제로 재편했다. 철도 기술 선두국가인 독일은

EU가 권고하는 상하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주회사 형태로 재편하여 철도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단일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다.

유럽 이외의 국가 중에서도 기능적으로 통합체제를 유지하며 각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의 고속철도 기술을 부러워했던 중국은 중국철도총공사(CR)에서 철도 운영, 유지 보수, 건설 등 철도 업무에 철도차량 제작까지 공기업이 담당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도 지역별 각 여객운송회사는 시설을 소유, 건설과 유지보수하며 운송까지 담당하는 상하통합형 구조이고, 각 여객회사는 통행의 완결도가 높고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운영자간 경쟁관계는 아니다. 이런 상하통합체제를 기반으로 철도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른 상태이다. 우리도 문제점만 일으키는 상하분리체제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할 때다.

IMF 자금 공여를 위한 어쩔 수 없던 상하분리, 다시 통합이 필요할 때

철도의 상하분리는 김영삼 정부가 초래한 1997년 외환위기 때 촉발됐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위기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IMF의 외화자금이 필요했다. IMF는 당시 세계 흐름이었던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탈규제, 공기업과 공공분야의 민영화, 자유무역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압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IMF가 외화자금 공여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공공부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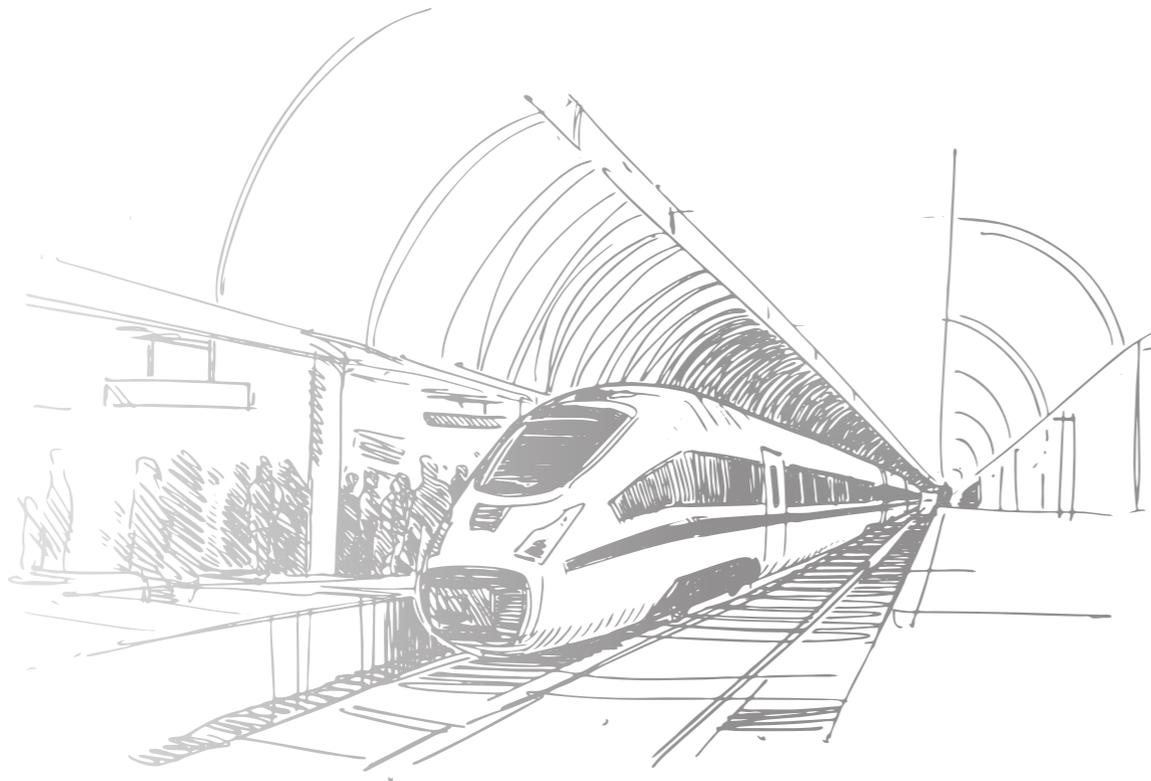
공기업의 민영화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면서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철도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IMF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철도운영부문의 민영화를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공사화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철도기관의 상하분리가 추진되었고 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05년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게 됐다. 한국철도의 상하분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이제라도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철도는 다시 통합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도 정책담변에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체제로 개편이 불가피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과 해외철도시장에서의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육성의 필요 등의 평가와 비전을 제시했다.

철도 상하분리의 문제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상하통합을 통해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세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더 나아가 장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IoT 등 최신 기술을 철도 운영에 접목하기 위해서 기반시설과 운영 간 기술적 융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에 수출할 수 있고 안전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위해서는 답은 간단하다. 바로 '통합'이다. ☺☺☺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정택수 경제정책팀 간사
wildwyde@ccej.or.kr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내 전국을 밝혔던 촛불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선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8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여러 정책 중 최저임금 제도의 향방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 월급 135만 2,230원으로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 3,803원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2~3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에게 기본임금만 받아서 생계를 꾸리기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다. 저임금 확산과 극심한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위기에 처한 경제상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의 원인은 소비 부족에 있다. 그동안 고수해온 저임금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면서 소비할 여력도 사라진 것이

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구매력을 확대시킨다면 성장-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반등의 계기를 이룰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정당들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공약한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크게 확산되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후보 5인이 모두 수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한 열망이 진보와 보수는 물론 세대를 초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임기 중 실현"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한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원안대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발표로 공약실천의지를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이 2018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저임금

경제

2017년 7월호



최초 요구안으로 불과 2.4%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수정안으로는 3.1% 인상을 제시했는데, 여전히 시급 1만원을 실현하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같이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매년 15.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 만일 한 해의 인상이 이보다 낮게 결정되면 그 다음 해엔 그만큼 더 높은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약 이행 첫 해인 올해의 인상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2.4% 인상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사용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나 낮은 상황에서 차등적용까지 적용하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은 강화될 것이며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정부의 의지마저 확인된 지금, 이를 저지하거나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사회적 논의를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장의 인건비 증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갑을관계 개선,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영세자영업자 보호 관련 공약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하여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공약들은 다른 대선후보들의 공약과도 상당부분 중복되는데, 아당은 영세자영업자 보호 정책이 자신들의 공약과도 일치함을 잊지 말고 관련 법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 할 것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전경련이 추천한 인사가 버젓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경유착의 핵심역할

을 해온 전경련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는 정경유착의 합법적 통로이자 재벌들의 이익관철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경련 추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경련 측 인사를 정부 의사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고질적인 양극화 해소의 계기로 삼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

2017년 7. 8월호

사법개혁,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허재필 정치사법팀 간사
heojp044@ccej.or.kr

지난 6월 19일,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법원행정처가 지속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에 문제의식이 있던 지방 법원 판사들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발생해왔던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 나아가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까지 포함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장의 권력 집중

이번 사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 개혁’을 주제로 하는 학술행사를 추진하는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하면서 촉발됐다. 법원행정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드러났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컴퓨터 조사를 거부하면서 반쪽으로 끝나버렸다. 마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일이 사법부에서 일어났다.

법원행정처가 개별 판사들의 활동에 압박을 가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한 것은 심각한 ‘사법권 남용’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력이다. 대법원장은 인사권과 사법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판사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 예산, 연구에 관한 사무 등 많은 권한이 법원행정처에 집중되면서, 사법부의 민주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사법개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사법 개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우선,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의 연결고리를 끊고, 기존의 사법권 남용 문제를 막아야 한다. 다음으로,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현행 인사 구조는 사법부를 수직적으로 만들고 민주성을 저해



◀ 지난 6월 19일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의 추가조사와 법원행정처 권한 조정에 관한 결의가 이뤄졌다.

시키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서 사법 민주주의를 구축해야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법원행정처 역할 재검토, 사건 담당자 징계 청구라는 몇 가지 ‘회의 결의사항’이 수용되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개혁의 첫 스타트를 끊은 셈이다. 하지만 목표는 아직도 저 멀리에 있다.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축소시키고,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제한하는 사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 못지않게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한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의 추가조사까지 거부한 상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그러나 그 사이에 2명의 후임 대법관 지명 과정이 남아있다. 시민의 신뢰와 후배 판사들의 신임을 상실한 사법부 수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법원은 존립할 수 없다. 사법부는 지금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법관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며 계기를 마련한 만큼, 사법부도 조직적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사법 민주주의를 구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선거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이다 —

유애지 정치사법팀 간사
aejiyu@ccej.or.kr



▲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6월 15일 비공개 회동에서 정치 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와 높은 주권의식을 정치권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권자들이 만들어낸 지난 19대 대선 이후에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추진하는 정당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여야가 선거법을 포함해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합의한 결과다. 정치개혁특위는 일반 상임위처럼 법안심사권을 가지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여야가 정치개혁 의제 논의를 위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여야 정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원칙이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여야의 명확한 비전 제시 없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던 과거를 우리는 기억한다. 정치권은 매번 정치개혁을 공언하며 정치개혁특위, 정치발전특위 등 비슷비슷한 이름의 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와 성과를 드러낸 적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핵심적인 정치개혁 과제는 외면하고 시간만 끌다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하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적 정치개혁의 핵심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정치적 결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투표자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거대 정당은 자신들이 득표한 표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유권자의 표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표(死票)가 된다.

민의를 왜곡을 최소화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이 비례적으로 배분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특히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와 비례적으로 연동되어 민의가 정확하게 의석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이러한 비례적 선거제도에서는 정당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와 학계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그 보완책으로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2015년에 이와 같은 취지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정치개혁의 큰 흐름이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면서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라



고 밝혔다. 그렇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 논의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에 앞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시민이 주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정치의 핵심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촛불 민심으로 드러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선거제도도 도입하여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선거제도 논의가 결코 여야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리당략적 논쟁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자신들보다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입장을 보인다면 합의점을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면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도입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문재인정부 첫 부동산 대책, 미친 집값 잡기에는 여전히 미흡

- 투기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집값거품 제거하는 것
- 8월 대책에는 집값거품 제거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근본대책 반드시 포함되어야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seongdal@ccej.or.kr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청약 조정지역 내에서의 분양권 전매금지, LTV·DTI 강화 및 집담대출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2주택 제한 등이며, 불법거래 단속도 집값안정시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예고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주거안정이 아닌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했던 과거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6.19 대책도 전매금지, 재건축 규제, 투기성 대출 규제 등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후분양제 이행, 분양원가 공개,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충, 보유세 강화 및 주거지원 확대 등 근본대책이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첫 투기억제책을 후퇴없이 꾸준히 추진해나가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적용범위 확대하고 시장과열과 상관없이 꾸준히 후퇴없이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자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악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투기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분양권전매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상환능력을 고려않는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정책을 경제활성화수단으로 악용해왔다.

그 결과 집값거품으로 서민들은 주거비 마련에 빚쟁이로 내몰리는 반면 부동산부자와 투기세력들은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정책을 주거안정이 아닌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하며, 냉온탕식 정책에 길들여진 투기세력과 투기시장 근절을 위해 주택거래시장 과열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기억제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과 세종시(공공택지) 등 일부에 국한한 분양권 전매금지도 광역시도 및 지방대도시 등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로 확대

적용해서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및 분양원가 공개, 공평과세를 위한 과표현실화 등 관련법 개정없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시행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박근혜 정부에서의 집값상승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더욱 가속화되어 강남 등의 집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반짝효과에 그칠 투기억제책에만 머물지 말고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미 상당부분은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과표현실화를 위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개선 등은 관련법 개정 없이도 시행가능하다. 서울시 SH공사는 10년 전에 아파트 분양원가를 61개 항목별로 공개했고, 아파트도 80% 완공 후 분양했다. 시세의 3~40%에 불과한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 빌딩 등의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인 80%로만 상향조정해도 보유세 인상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8월 대책에는 집값거품 제거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근본대책 반드시 포함되어야

지금까지 근본대책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입장은 부정적이다.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건설사 중심의 선분양 특혜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을 우려하고 있고, 주거불안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거비 확대도 필요하지만 구체적 계획과 실행방안은 부재하다. 나몰라 고분양가 근절을

위한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부활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간특혜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도시재생 뉴딜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의 집값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미봉책임을 투기세력이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반증이며, 근본대책 추진없이 집값도 결코 안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김현미 장관이 6.19 대책을 투기세력에 대한 1차 경고 메시지라며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추진을 암시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대책에는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근본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건축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뿐 아니라 무분별한 용도변경 및 종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보유세 강화를 위한 세율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 적극 소통해서 실효성있게 추진해가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헬조선을 낳았고 헬조선에 신음하는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과거 정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미봉책과 땀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서민들의 주거불안만 심화시켜왔고, 국민들은 더 이상 무능력한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강남 과열만 잡고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반짝 대책에 안주하지 말고 집값거품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

필진
김성달

2017년 7월 8일

도시재생사업에 건설업체 참여 안돼!

– 성과내기에 급급해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해 반복할 것 –
– 공공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된다 –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
nari@ccej.or.kr

경실련은 지난해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와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추진된다. 실제 조합원이 주체가 되지만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건설사다. 주택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민간사업자는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를 내모는 커뮤니티 파괴의 문제가 심각하다.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은 미흡하지만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도시환경과 공동체 파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첫 발자국을 댄 셈이다. 그런데 사회문화적 성격이 강한 공공사업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사업자에게 또 다시 넘기려는 것은 과거 개발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에서 드러났던 문제를 반복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5년 내 500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무리하게 민간사업자까지 참여시켜 대통령 공약 이행 성과를 내겠다는 마음이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공공사업을 부동산 투자회사와 건설사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와 세입자를 내쫓

는 민간사업에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회복하는 공공의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의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도시재생사업자의 시행자 요건을 부동산 투자회사, 민간건설업체 등으로 확대함(안제26조)

□ 개정안의 문제점

○ 민간의 사업 주도는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 훼손

- 김현아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를 공공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제안 및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지원과 역할 강화라는 특별법제정 취지 훼손.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의 개발이익 추구 수단이 된 도시정비사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회복 등 경제·사회·문화적 도시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

- 도시재생이 전면 철거를 통한 물리적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꾀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공의 꾸준한 관심과 역할이 필요. 도시재생은 단기간의 경제적 성과보다는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성과에 가치를 두어야 함.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측면에서 한계.

-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시 공모를 거쳐 시행자를 선정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한다든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공공성을 담보하겠다고 주장함.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이익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어렵고, 단순히 공공시설 기여만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주민참여가 일천한 상황에서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경제·물리적 개발에서 공동체 회복 도시재생으로

- 과거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의 역할 없이 토지 소유주와 민간 건설업체가 사업을 주도하여 주민 참여과정이 생략되고,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투기성 자본이 유입되거나 개발이익은 일부 토지소유주와 건설업체에게 귀속되고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는 내쫓기는 등 공동체 파괴문제 심각.

-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에서 배제됐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분산됐던 행정지원체계를 통합하여 효과를 증대하고 정부 내 도시재생 지원기구를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된 현장 중심의 사업 지향 필요.

-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재정 지원을 명시하고, 계획의 수립에서 사업의 시행까지 과정을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에는 지역적 기반을 두고 공유가치를 추구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만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여 사업과정에서 이윤추구를 배제하고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유지 확대 필요.

○ 성과가 아닌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모델 개발해야

- 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년간 50조원의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하고, 500곳을 추진하겠다는 대규모 개발사업.

- 그러나 대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엔 일선 현장의 도시재생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공공

의 지원체계나 실행조직조차 갖춰지지 못한 상황. 자칫 대통령공약 사업 이행에 급급해 할 경우 무분별하게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우려가 높아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 기획이나 계획단계가 아닌 시공과정에서 참여로 엄격히 제한해야함.

□ 결론 및 의견

○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주도, 지속가능성, 공공성 유지 확보를 위해 민간의 사업제한 및 사업시행을 불허하고 공공의 사업시행으로 제한하는 기존 법안을 유지 해야함.



리베이트 근절 포기한 보건복지부?

-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관련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

박지호 사회정책팀 간사
jhpark@ccej.or.kr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감기에 걸렸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처방전도 받았다.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샀다. 평범하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기에 “검찰, A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274명 적발...대표는 구속” 기사가 더해지며 나의 의구심을 자극한다. 그들이 나에게 주사한 약과 처방한 약은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리베이트의 결과물이었을까?

바로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이다.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등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사 속 274명의 의사들은 A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3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A제약사 대표는 영업사원들을 투입해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약 56억원을 제공했다.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배우자나 병원 사무장 등 제3자를 내세워 금품을 받은걸 보면 의사들은 리베이트가 잘못됐다는 걸 명확히 안다. 그래도 그들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왕왕 볼 수 있는 정부의 행정처별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550억이라는 과징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하고 재위반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의약품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최근 리베이트씬(Scene)에서 가장 핫한 제약 회사가 있다. 한 의학전문지는 해당 제약회사를 “3년 연속 존경받는 제약사 1위”라 소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 지난 5월 22일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들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의약품도 이미 시장에 존재하여 충분히 영양급여 제외를 내릴 수도 있는 약들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대체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일부 환자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영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약제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의 경우,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서,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

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으며, 질환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했고, “뇌전증 치료제 트리랩탈필름코팅정의 경우, 약제 혈중농도 변화 시 발작 위험이 있으며, 발생 상황에 따라 환자에 심각한 위해 초래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과학적 입증은 없다. 위의 입장이 전문이다. 환자단체의 우려와 일부 전문가의 우려. 이것만으로 정부는 합당한 행정처분을 포기했다. 아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내려놨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에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5억원

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학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그들은 리베이트를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세우고 영업 활동을 하는건가? 그렇다면 노바티스는 한 의학전문지의 소개처럼 존경받는 제약회사는 분명 아니다. 사실 그렇게 소개한 의학전문지도 노바티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게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건 ‘안비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결정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제도 도입의 취지 등을 훼손한 것이라 평가한다. 그래서 지난 5월 22일 일부의 ‘우려’만을 고려하여 대체 의약품 도입 등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잘못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일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드러다 봐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이 됐어도 리베이트가 계속된다. 그렇다고 사건이 터질때마다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대응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한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의료인들의 리베이트 거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전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관심이 낮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병과 체질에, 몸에 맞는 약이 아닌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의한 약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항상 피해는 시민들‘만’ 본다. ☹☹☹



‘문재인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현장 들여다보기

이성윤 경제정책팀 간사
pain2co@ccej.or.kr



▲ 지난 6월 30일 재벌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경실련, 국회의원 최운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의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재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는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가 맡았다. 토론자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원근 교수



▲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는 박상인 교수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홍명수 교수(명지대 법과대학), 강지원 입법조사처 조사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저성장,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막고,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서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

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을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재벌의 문제를 총수일가의 전횡, 족벌체제, 하청계열화로 인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



▲ 지난 6월 30일 재벌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방안으로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 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 개혁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위해서는 ▲재벌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방지 ▲공익재단을 통한 우회승계의 방지 등의 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중보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조항 신설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방식 개혁을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 주식보유비율의 제한, 손자회사 지배금지 등의 규제강화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을 위해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및 전자·서면투표 의무 실시 등의 상법 개정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및 경영권 승계 방지를 위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제재 근거를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으로 이관하는 등의 입법과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금산복합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 현황을 소개하고 이 중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편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 ▲산업자본인 KT의 특수관계인이 은행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케이뱅크 등을 금산분리의 잠재적 위반 사례로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자산 총계 규모가 크거나, 제1종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산복합그룹을 체제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금융회사 집단으로 보고, 이들에게 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형성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독체계와 유사하게 '(가칭)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제적 위기에 대한 조사·연구 및 위기 예방 권고, 금융감독 유관기구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재벌 개혁 입법의 어려움을 말하며,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과 더불어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담겨있는 상법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원근 교수(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는 재벌개혁의 전제로 정경유착을 해결하기 위한 거대경제권력의 분할 방법 및 정책,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 공정위의 강화를 넘어 노동시장 개혁과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새로운 성장체제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홍명수 교수(명지대 법과 대학)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개별기업 지배구조와 기업집단 지배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느 한 쪽만 해결해서는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콘체른(일종의 기업결합체)법과 같이 계약 콘체른과 사실상 콘체른으로 나누어 적용

되는 법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벌정책과 금융정책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강지원 조사관(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재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패키지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방안 중에 계열분리와 기업분할명령제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제도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박상인 교수가 이야기한 이스라엘 개혁 사례는 한국 재벌개혁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이지만, 두 나라의 차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주장들이 토론회에서 멈추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방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재벌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본다. ☺☺

본말이 전도된 광명도시공사

- 관심과 감시만이 혈세낭비를 막는다.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
dream2m@hanmail.net

6월1일 제224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광명도시공사>관련 조례가 광명시의원 5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하였다.

광명도시공사 조례는 지난 민선5기 양기대 시장이 '광명KTX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2011년과 2012년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지만 부결된 조례이다. 민선6기 재선에 성공한 양기대 시장은 이번 광명도시공사에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였고 결국 6년만에 광명시의회는 조례를 가결시켰다.

그러나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많은 광명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점이 있어서 이번 조례가결이 반갑지만은 않다.

광명도시공사, 태생적인 우려가 있다.

광명지역에서의 도시공사는 '개발환경의 한계'가 있다.

광명시는 38.50km²에 약 34만 인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서울과 인접해 있다. 또한 인구밀도도 전국 5위에 속하는 주거 중심의 도시이다. 현재 광명시가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사 사업은



▲ 광명도시공사가 맡게 될 광명동굴사업에 반대하는 광명경실련 회원들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개발의 방식이어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 원주민이 내쫓겨날 우려도 있다. 또한 광명시는 개발환경이 부족하여 3개의 사업이후 도시공사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다.

두 번째로 광명도시공사는 '보은인사 또는 측근인사 인선'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현상으로 공사에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이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이 커서 정치적으로 휘둘릴 우려가 있다. 이는 전문적인 인재를 채용 못하여 운영상, 사업상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광명도시



※ 참고 : 광명동굴 적자에 대해...

광명시의 공식입장으로는 "광명시는 광명동굴 개발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6년간 국·도비 216억원을 포함해 총 775억6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331억원은 계속 사용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한 광명시 모 시의원은 2016년12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명동굴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약2억천 원의 예산"이 투입 또는 투입예정(2018년 계속비까지)이라고 하면서 매년 200억~300억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공사가 맡게 될 사업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명동굴'은 지금의 유명세만큼이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고, 2012년 개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 도시공사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성에 대해 표면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광명경실련 도시공사 조례심의에 대한 평가는... "본말이 전도", "대의민주주의 무시"

광명경실련은 이러한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우려에 대해 4월13일 광명시 담당과의와 의 간담회를 통해 도시공사의 타당성(사업성, 시급성, 인사문제 등) 검증을 위해 주민공청회가



▲ 도시공사를 의결하려는 시의원들은 밖에서 회의중이고 반대하는 의원들만 앉아있는 광명시의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5월22일 광명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가 도시공사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광명시의회가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광명경실련은 타당성이 검증된다면 여러 우려에 대한 불식을 위해 조례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제언을 했다.

그러나 5월23일부터 시작된 ‘광명도시공사 관련 조례심의’는 특정 정당이 불출석한 반쪽짜리 상임위원회로 진행되었고, 광명시의회가 도시공사에 대한 타당성 심의보다는 조례 문구에 초점을 맞추거나, 시민공청회를 조례가결 후 진행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도시공사 조례심의 과정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한다.

첫째,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가 이번 광명도시공사 조례에 ‘인사청문회’, ‘조례에 사업명명시’, ‘시민공청회 개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세밀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광명경실련은 시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사업성이 포함된 ‘광명도시공사의 타당성’을 심도 깊게 논의는 하지 않고, 법조항 위반이나 조례안 수정에만 몰두하여 조례를 가결한 것과, 조례가결 후에 시민공청회를 하는 등 본말이 전도(顛倒)된 심의를 했다고 평가한다.

둘째, 광명경실련은 광명도시공사 조례안과 함께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70억

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올린 광명시에 대해 지방의회의 뿌리를 흔드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평가한다. 지방자치시대에 광명시의회를 존중하며 절차를 지켜야할 광명시가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에 대한 예산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이다.

셋째, 절차가 무시된 광명도시공사 안전에 대해 야당 시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회가 6:5의 쪽수로 가결시킨 것은 광명시의원들 스스로가 시민들이 위임한 ‘시정감시’와 ‘견제’라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넷째, 이번 회기에서 광명시장과 광명시의원들이 보여준 절차를 무시한 행태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공사사업을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행정과 의정에 대해 비판한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 된다면 민선6기 시장과 제7대 광명시의원들은 차기 2018년 지방선거에 광명시민들 앞에 다시 설 자격이 없다고 본다.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만이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다.

광명시의 주인인 광명시민들과 소통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광명시>는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되도록 많은 정보를 광명시민들과 공유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공사 사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도시공사 조례 심의 전 광명경실련 회원들이 시의원들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명시의회>는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사업에 대한 평가와 도시공사로의 전환 이후 사업성과 지속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즉각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평가 및 도시공사 검증에 관한 특별위원회(도시공사 특위)’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도시공사가 왜 필요한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타당한지”,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구조인지”, “공단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광명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의 혈세가 허투루 쓸 수

없도록 감시를 해야 하고, 현재의 시장과 시의원 및 내년 지방선거 후보들이 광명시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광명경실련은 도시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광명도시공사 사업계획과 운영에 대해 광명시민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감시할 것이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시의회가 광명도시공사 공청회와 도시공사 특위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운영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광명도시공사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청주시청사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최운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ok@ok.or.kr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청주시는 인구 85만명, 면적 940km²의 중부권 핵심도시로 떠올랐다. 불가피하게 청사 사무공간이 부족해 2,820명의 공무원들은 본관동 외에 5개의 별관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다. 청주시는 현재 임시청사 임대료로 연간 5억여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제기된 시청사 건립 문제는 한동안 쟁점이 되는가 싶더니, 최근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시민들은 시청사를 새로 짓기로 했는지, 어디에 지을 것인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주무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공공시설과에 따르면, 현재 부지매입이 30%



▲ '청주시청사,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시민토론회



□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개요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일원
- 기 간 : 2015년~2023년(공사기간 2020~2023)
- 규 모 : 대지면적 28,450㎡(8,260평), 연면적 49,916㎡(15,126평)
(본청 22,319㎡, 의회 6,597㎡, 부대시설 21,000㎡)
- 사업비 : 2,312억원

이게 끝이다. 구체적으로 시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6월 27일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청사,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언론, 시의회 소속 패널을 초청해 시민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원고는 당시 거론됐던 쟁점들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충북·청주경실련뿐 아니라 다양한 그룹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1.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① 타당성 보고서, 재검토해야

「통합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최종 제출된 시점은 2014년 10월이다. 그리고 2016년 2월, 청주시청 청사 부지 북쪽에 바로 인접해서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3개동 신축 사업계획안이 최종 승인됐다. 당연히 타당성 보고서엔 주상복합 빌딩 신축이라는 변수가 감안돼 있지 않다.

② 설계공모 전에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현 부지는 협소하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설계공모 전에 설계지침의 기본 방향이 담긴 과업지시서가 얼마나 밀도있게 성숙된 내용으로 완성되느냐가 중요하다. 설계 기간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 전문가들의 참여와 토론을 거쳐 과업지침의 내용과 방향을 잡아야 한다.



▲ 시청사 조감도

정도 진행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 설계공모에 들어간다고 한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석 달간(3.13.~6.20) 「시청사 건립 시민제안(아이디어)도 공모했다고 한다.

조성훈
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12일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에 접어드는 날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대북사업이지만 2008년 관광객 피격으로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관광 재개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관광 중단으로 인해 투자기업 49개 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은 6,500억원, 투자금 손실은 3,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강원도 고성 지역 역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입은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3,000억원에 이른다. 투자기업과 관련 지자체는 막대한 피해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남북 민간교류 유연 검토, 민간단체 방북 허용, 남북경협 기업 피해 보상 추진 등 이전 정부와 달라진 대북정책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평화구상'에서 '비정치·군사적 분야' 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즉 쉬운 부분에서부터의 관계 복원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그 쉬운 부분이 금강산관광 재개가 될 수 있으며, 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복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이

③ 재원 조달, 꼼꼼히 분석해야

청주시는 타 지자체 청사와 비교할 때 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하다. 그러나 청사 면적과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청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과연 2,312억원의 사업비가 적정한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④ 타 지자체 사례 타산지석

서울시청의 행정공간은 지나칠 만큼 폐쇄적이고 협소하다.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이 강조되면서 행정공간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타 지자체 실패 사례도 상당히 중요하다. 청주시가 지금부터라도 타 지자체와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다. 현재 계획된 부지는 청사 면적으로는 협소하다지만 원도심에서는 꽤 넓은 편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③ 행정의 편의성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선돼야

시청사 건물의 배치와 동선이 중요한데 시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배치계획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되면 시와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누리는 공간밖엔 안될 것 같다. 시청 광장을 인근 청주역사와 청소년광장, 성안길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디자인하면 시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④ 시민들에 의해 유지·관리돼야

시청사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어떻게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능적인 편의 시설들을 배치하기보다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간으로 여지를 남겼으면 한다. 주말이면 로컬푸드장터나 공유시장이 열리는 공간, 시민들의 생활과 느낌이 축적되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완벽한 디자인보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에 의해 유지·관리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⑤ '에너지 먹는 하마'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청주시청사는 재생에너지와 태양광, 지열, 패시브하우스 등 검토 가능한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는 등 공공건축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청주시청사에 담아야 할 것들

① 역사성이 담긴 공간

청주시청사 부지는 청주의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청주시 본관동은 1965년에 완공된 건물로, 등록문화재 대상이다. 시청사 마스터플랜 및 과업지침서를 수립할 때 본관동을 보존, 활용하는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② 원도심이므로 주변의 컨텍스트와 어울려야

원도심이므로 시청사 건물로 다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소와 장소를 연결해 주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너무 많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 5.24조치,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산 동결과 물수 조치와 금강산국제 관광특구법 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이며 조속한 정책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금강산에 설치된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하면서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금강산관광 재개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나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카드는 명분도 충분하며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금강산관광이 단순히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설악산 지역과 금강산 지역을 연계하는 남북 관광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관광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더불어 많은 남한의 기업들이 금강산관광 사업에 진출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임을 알려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북경협 사업이 저성장 침체 기조에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모든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과 북의 대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남과 북의 주민,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날 처음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평화의 뱃고동 소리에 설레었다. 이후 우리는 금강산관광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되는 지금, 그 설렘과 꿈은 다 어디로 갔는가? 속히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하며,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등 더 많은 남과 북의 협력 사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

회원 인터뷰 - 나는 경실련 청소년 회원이다!!

정리 :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dongi78@ccej.or.kr

경실련에도 10대 회원이 있습니다. 김시연 회원은 토론회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복을 입고 와서 어른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는 회원입니다. 이번에 월간경실련 회원 인터뷰로

만나보게 돼서 기쁩니다. 10대들은 지금 사회 현안과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시연 회원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경실련 4년차 회원인 김시연입니다. 부천 부명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Q. 경실련에 월 정기회비도 납부하시고 경실련 회원이 되겠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로 경실련에 회원이 되셨나요?

A. 중학교 1학년 때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신문

월간경실련

2017년 7. 8월호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 경실련이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사회의 부당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주 실렸었습니다. 특히 신문사와 협력해서 공약평가를 하는 특집들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는 재벌문제와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얼마 전 신문매체에 인터뷰에서 외교, 자사고 폐지에 대해 찬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저는 외교·자사고 폐지가 경실련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교·자사고는 학비가 일반고의 3배 이상으로 높고, 우선선발권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고등학생 시기부터 고착화시키고 일반고 강화의 근본적 한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는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시학원이 되었다는 비판이 많고, 자사고는 공기업, 은행 등의 임직원 자녀가 직장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대물림하는 귀족학교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과 양극화 심화의 방지를 위해 외교·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작년 촛불집회부터 올해 대통령선거를 지켜보시면서 청소년으로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A.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이 참여한 촛불

집회로 청소년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년의 시민·정치적식이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걸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상식을 넘어서 선생님이 지시해도 부당한 지시라면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잘못된 관행이 하나 둘 개선되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원 선거와 학생자치에 관한 관심도 실제로 미약하긴 하지만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이 더욱 높아질 거라 기대합니다.

Q.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18세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년 서울의 봄, 87년 6월 항쟁 이후, 참여정부 시기 등등 역사적으로 선거연령 하향이 논의된 시기는 대부분 민주주의가 꽃피던 시기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여 확대의 역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족만 참여하던 정치에서 자본가, 노동자, 흑인노예, 여성 순으로 참정권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정보화시대, 4차산업의 시기에 정보에 가장 빠른 청소년이 미성숙하여 투표권과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아기가 넘어지지 않고 걷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걷기 위해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청소년이 미성숙하다 해도 정치적 경험을 허용해서 정치

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18세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이 생각한 진로 또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텐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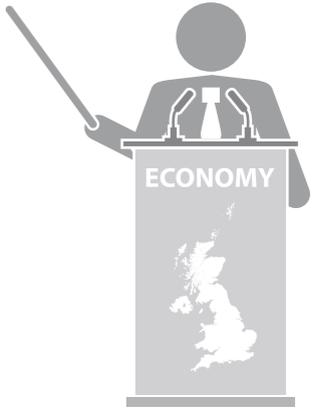
A.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재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벌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정치인들조차 재벌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야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재벌의 끝없는 탐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직업이 정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당에서 재벌·양극화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들을 조직하고 함께 경제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Q. 회원으로서 경실련에 바라는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회원으로서 경실련 행사와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주로 오전 시간대여서 학생이나 직장인은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일부 행사는 오후 시간대에도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과거처럼 회원 모임이 재조직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회원의 입장으로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구인 한국투명성기구,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모두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경실련

운동의 연속성을 위해선 미래세대가 꾸준히 경실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실련이 앞으로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실련에 바라고 전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범적인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 있는 회원이었습니다. 김시연 회원의 꿈처럼 이 사회의 부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지금 현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염원들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더 밝게 꿈꾸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신입간사 3인 인터뷰

정리 :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사진 : 권태환 간사

지난 3개월 간 수습간사를 거쳐 이번 달부터 정 간사로 활동하게 된 신입간사 3인방을 소개합니다. 수습간사 전원(3인)이 정간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실련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김정훈, 정호철, 허재필** 간사를 소개합니다.

■ 먼저, 세 분을 잘 모르실 회원님들께 각자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정훈: 안녕하세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새로이 정간사가 된 김정훈입니다. 나이는 서른 둘. 많지도 적지도 않게 이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남동생과 남양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조부모님 이전부터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했고 이후에는 출판사 편집디자인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년 간 디자이너 생활을 하였고, 출판마케팅으로 전환을 위하여 1년간 마케팅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판마케팅 관련 직종으로 취업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인척의 도움으로 중고차매매영업을 2년간 하였고, 현재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운동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자료 수집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입니다.

호철: 반갑습니다. 국제팀 신입간사 정호철입니다. 우선, 저를 한 단어로 표현 하자면 '노마디즘(Nomadism)'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네요. 항상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성격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변사람들이 저를 볼 때면 항상 "자유로운 영혼"내지는 "역마살이 켜다"고 흔히 얘기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5년간 4개국을 떠돌면서 직장생활과 유학생활을 했었어요. 대학 졸업 이후 여행사 가이드 일부터 시작해서 특파원, 방송작가, 올림픽대표단 안전요원을 거쳐 해외 공관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덕분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죠. 그런 저에게도 나름 원칙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 그 원칙의 결과가 현재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정호철, 허재필, 김정훈 간사

재필: 안녕하세요. 경실련 막내로 들어오게 된 신입간사 허재필입니다. 대학에서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현재 정치사법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음. 우선 저는 영화광, 역사광입니다. 영화나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삶의 제약, 어려움을 뚫고 뭔가를 성취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들 가슴 뛰지 않나요? 영화 '트럼보'나 역사 중에 '프랑스 혁명'처럼 말이에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무언가 만들어보기를 꿈꾸면서, 경실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능숙한 자취생입니다. 혼자 자취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혼자서 영화도 자주 보고,

맛집도 가고 잘 노는 편입니다. 나름 즐겁게 살고, 생존력이 좋다고 할까요? 일하는 것도 비슷하게 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기분으로 있는 힘껏 활동하고,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 본인에게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경실련이란?

정훈: 입사 전, 경실련은 단순하게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는 경실련이 생겨난 사회적 배경과 '집값 거품빼기 운동'같은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꾸



정호철 간사 - 국제팀

어 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조금은 더 괜찮게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경실련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철: 저에게 경실련이란 '유토피아' 같은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실련은 민주적인 조직 구조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고, 활동가 개개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공무원 조직은 조직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나 획일적인 가치지향—국위선양(國威宣揚)—으로 인해 업무의 자율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한때 저는 애국인 줄 알았어요. 또, 허례허식과 같은 전시행정을

하고 있을 때면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었죠. 그랬던 저에게 경실련은 업무의 자율성과 가치의 다양성을 되찾아 줬습니다. 보고 배울 것이 무궁무진한 미래,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인데, 경실련은 제게 유토피아처럼 매우 매력적인 조직으로 다가왔죠.

재필: 입사 전후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이름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입사 전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제일 눈에 띄었었어요. 경제라는 단어 때문에, 경실련이 뭔가 차갑고 냉정하고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제일

와 닿는 단어는 '정의'예요. 불의에는 화를 내고, 잘못된 것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서 뜨거움, 열정 같은 게 느껴집니다. 경실련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무게감이 느껴지면서도, 조금은 설렙니다.

■ 100일 동안(수습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정훈: 19대 대선 홍대 앞 선거독려 거리캠페인 때 '딱지왕' 사진으로 인터넷에 올라간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사진인데 아무런 언지 없이 기자가 바로 인터넷에 올려 당황스러웠고 아는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는 연락을 많이 할 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단 한명도 연락한 친구가 없었어요. 혼자서 괜히 오바했던 거 같아서 기억에 더 남습니다.

호철: '수습간사 사업기획안 발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습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고, 저희 신입간사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신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기업에서 생각하는 적자생존 식의 통과의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준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기획안을 두 번 정도 갈아엎었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끔찍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한 쪽의 입장만이



허재필 간사 - 정치사법팀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필: 19대 대선 때 오프라인 캠페인에서 활동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밖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해본 것이 처음이었어요.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일희일비했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경실련을 알아봐주고 격려해줄 때, 뿌듯했습니다. 또 이번에 대학생 서포터즈를 맡았던 게 기억에 남아요. 열정적인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 스스로 동기부여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앞으

로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실련에서 하고 싶은 업무 또는 활동

정훈: 아직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운동이랄까, 의제랄까 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제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크게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호철: 국제사회에 경실련 운동을 알리고 싶어요. 우리 경실련이 국제무대에서 '포컬포인트(Focal Point)'로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간사 - 도시개혁센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로서 이름을 알리고, 국제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 슈퍼리치(Super Rich)에 의한 기업 지배구조 왜곡이나 분배 문제에 대항하여 우리 경실련의 재벌개혁 운동이나 세금관련 운동들이 국제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실련의 운동 경험과 정책 대안들이 다른 나라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거예요.

특정 운동의제와 관련하여 "CCEJ"이라고 하면, 아시아 지역의 경제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국제 NGO 단체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실련에서 세운 목표예요.

재필: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직접 민주주의' 운동이에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발안제'에 가장 꽂혀 있어요.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안하니, 국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사실 국민들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가 이미 가득 차 있잖아요. 이번에 생긴 '문자행동'도 그렇고, '문재인 1번가', '광화문 1번가'가 엄청난 관심을 받은 것도 그렇

고, 이미 환경과 조건은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걸로 발생할 문제만 예방해서 다듬는다면, 운동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 10년 후의 내 모습은?

정훈: 아직은 풋내기 활동가이지만 10년 후에는 그간의 운동을 통해 성과도 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활동가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세상이 변하는 일에 저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후면 마흔이 넘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믿음직한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동생에게는 든직한 형이었으면 좋겠어요.

호철: 경실련에서 국제 운동을 담당하면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사회문화 비평가'로서 한 번 활동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타국의 사회문화를 기행문이나 에세이 형식으로 한 번 써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은 통찰력이나 전문성 면에서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제가 경실련 활동가로서 잘 성장해 나간다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국제사회가 인식하지 못한 사회 한 편의 소외된 문화나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알리고 싶어요. 언젠간 그런 기회가 꼭 있을거예요.

재필: 무엇보다 정치개혁 운동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있는 힘껏 해보면, 10년 후에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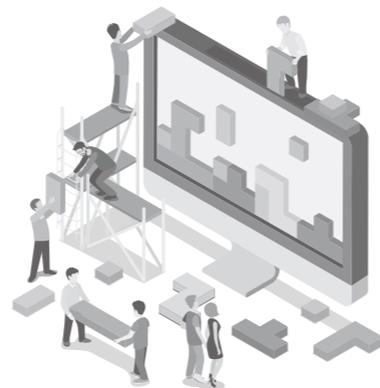


떻게 될 수 있겠죠? 하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삶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고민은 좀 해소되고요. 저 뿐만 아니라 청년 모두요. 지금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높은 집값에 많이 고통스러워해요. 저도 그런 문제를 겪는 청년 중 한명이구요. 앞으로는 청년들이 그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경실련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도 희망은 있으니까요, 저도 그만큼 열심히 활동 해야겠네요.

개성이 넘치는 멋진 청년들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제 경실련 상근자가 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려고 합니다. 어깨 걸고 힘 모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열정 넘치는 신입간사들과 함께 새로 위질 경실련을 기대해주세요. ☺☺



혜화동이야기 - '책방이음' 인터뷰

정리 :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dongji78@ccej.or.kr

경실련 사무실이 있는 혜화동에 소개하고 싶은 동네책방이 있습니다. 이음은 동네책방이면서도 이윤을 남기지 않는 비영리 서점입니다. 2005년 문을 열고 2009년 12월까지 개인이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손님으로 책방을 드나들던 조진석(현재 대표)님이 본인이 일하던 공익단체 '나와우리' 사업의 하나로 책방이음을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7월 4일 책방이음 조진석 대표님과 인터뷰. 시간 내주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니 책방운영에 수익이 0보다 높아지는 경우 플러스 되는 부분은 장학금 지급, 베트남전쟁 민간인희생자 유족과 피해마을 지원, 출판 생태계를 살리고 시민사회를 후원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 조진석 대표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월간경실련 독자들에게 책방이음 소개를 간단히 해주신다면?

A. 책방이음은 유일무이한 비영리공익서점입니다. 유일무이한 것을 추구한 건 아니었는데 비영리공익단체 중에서 책방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공익의 범주를 넓히는 단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서점 쪽에서도 비영리 공익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 원하지 않았

지만 유일무이한 비영리공익서점이 된 거죠.

이 동네에 생각보다 책방이 많아요. 서점들이 많지만 각자 겹치지 않는 영역들로 공존하고 있어요. 60년 넘은 동양서림(중고생참고서-문제지-베스트셀러-인문학), 가톨릭서원(종교), 마음책방(심리학), 풀무질(사회과학), 알라박스(독립출간물), 방송대서점(대학교재), 알라딘중고서점 등 종류별, 주제별로 서점이 있어요. 겹치는 물이 너무 높으면 한 개 서점만 있어도 되니까 공존이 안 되는데, 서로 겹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보니 공존할 수 있는 거 같아요.

Q. 서가구성이 남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기준이 있으신지?

A. 일단 저희도 상업적 서점이다 보니 팔려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도서관을 해야겠죠. 잘 팔리는 책은 안 놓는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굳이 기준이라 한다면 내가 두 번 읽고 싶은 책, 간직할 만한 책, 소장할 만한 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책, 동물, 생태, 사회이슈, 다크사진, 세계문학 등의 책들이 많은데 책은 다루는 사람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손님(독자)들에게 이런 책 어떠한 말 걸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토론자가 아니라 사회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Q. 책방이음 하시게 된 계기?

A. 2008년 3월부터 이 동네에 '나와우리' 사무실이 있어서 대학로로 출퇴근하게 되었어요. 서점이 있어 둘러봤는데 느낌이 좋고 분위기도 좋고 갖고 있는 책도 좋았어요. 독자가 많지 않은 책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은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 때마다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2008년 부흥회 하듯이 선의의 기부자를 모집하고 그분들과 같이 행사를 했지만 2009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9년 말에는 문을 닫는 상황이 되었어요. 2009년에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한 운동 차원에서 '이음아트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결국



동화 '일투성이 제아'의 황선미 작가와의 만남

대책을 못 만들고 문 닫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책위원이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됐죠. 영리(사익)라는 부분에서는 존재하기 어렵겠다 판단이 들어 지금처럼 '나와우리' 사업으로 함께 하게 된 거죠.

Q. '나와우리'에서 베트남 전쟁 피해자들을 돕고 관련된 회복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나와우리'는 국제 인권 평화단체예요. 나와 내 이웃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뜻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같이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내년이 20주년이에요. 98년 만들어서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위안부할머니들과 여행도 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런 단체들이 98년에 많아졌어요. 영역으로 따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니까 베트남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베트남 전쟁 피해자들에게 매달 생활지원금을 보내고, 마을에 전쟁을 기억하는 위령비를 세우고, 피해자의 집을 짓고 피해마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사회기반시설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다른 단체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하게 된 거죠.

Q. 대학로 임대료가 비싼데,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수익은 나누지만, 반대로 적자인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물론 적자가 나는 달도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적자가 나면 '나와

우리'에서 자금도 투여하고, 여러 수익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해결해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외부적 지원 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출판사 생태계복원 사업, 장학사업 등 하고 계시는 공익사업들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2009년 이음을 인수하며 이전 개인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출판계가 각자도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대학원에서도 교재를 PDF로 찍어버리는데 저는 문화파괴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수도 줄었어요. 전업으로 작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소설, 에세이, 사회과학의 한정적 부분에서만 많이 나오지 예술, 자연과학분야는 출판사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출판사가 책을 내지 않으면 독자들이 다양한 책을 보지 못하게 돼요. 순환고리가 깨진 게 오래되었고 복원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작은 출판사 책들을 많이 보여주고, 주제별로 도드라지게 보이게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자 없이 독자 없고 독자 없이 저자 없는데 그래도 비중을 둔다면 건전한 출판생태계를 위해 저자들이 저자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은 국경을 넘는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생산자가 있어야죠. 학술적 분야에서 오리지널(original) 연구자가 나오지 않으면 파생되는

것도 없어요. 오리지널(original)을 만들 수 있는 석박사생들, 그들의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자를 키우는 작업을 장학금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조선인 학생,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생, 베트남인 유학생들이 수혜를 입었고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그러다 보니 동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가 변하려면 사람을 기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바탕이 되는 게 책이고요. 사회가 선순환 되도록,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Q. 책방이음 회원들은 주로 어떤 분이신가요?

A. '나와우리'와 '책방이음' 회원은 같아요. 5천

원 이상 회비 내는 분들은 뿌리회원이신데 책방의 근간이 되는 분들이시죠. 저희 운동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앞새회원은 책 구입하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고 줄기회원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연 200명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 구정윤 자원봉사자(대학생)

“이음은 몇 번 책 사러 다녔어요. 종강하고 친구랑 약속이 있어 대학로 왔다가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고 쓰여 있어서 바로 하게 됐어요. 책 판매, 택배발송, 추천사 쓰거나 띠지 만들어서 책 배치하는 일을 합니다. 사장님 따라서 책 사러 간 적도 있는데 재미있는 경험하고 있어요.”

Q. 책방이음 외에 다른 시민단체나 사회활동을



동네책방으로 여러 모임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A. 핫핑크돌핀스라는 서울대공원 감금시설에 갇힌 돌고래를 바다로 되돌려 보내고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단체도 돕고 있고, 서울아트시네마, 독립영화 다큐전용 인디스페이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역사문제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노들장애 인야학 등도 후원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월간경실련 독자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책을 추천 해주신다면?

A. 경실련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단체잖아요.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라고 최근 나온 책인데 돌베개에서 출판하고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동춘 교수가 쓴 책이에요. 한국사회의 지난 30년을 한 사회학자의 글로 보는 책이에요. 경실련의 지난 30년을 사회학자의 30년 글과 비교하며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경실련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과 잇닿는 점에 있다기보다 정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변하지 않는 구조적인 부분도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삶이 더 팍팍해진 것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는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무소유'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여전히 가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시간이



책방이음 입구

라고 생각해서 '모모'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책방,
사람과 책을 이어주는 책방 '이음'
동네책방으로 지역을 살리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부분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고마운 책방 '이음'입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에 방식은 다를지라도 같은 길을 걷어가는 좋은 벗이 있었습니다.

경실련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 운동, 입법 운동을 열심히 하는 동안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책방이라는 형태로 시민과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않아도 우리는 나란히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종교인 과세' 또 2년 유예?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경실련이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김진표 위원장을 비판하는 댓글과 조속시 시행하라는 의견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OECD 국가 중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납세에 성역은 있을 수 없죠? 종교인 과세는 상식입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금 공정위의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으로는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재벌개혁 방안, 일정,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제시하여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치의 후퇴 없는 철저한 재벌개혁을 기대한다며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심 대부분을 반영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권 고질병을 이제는 고치자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이대윤 | 권리 위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윤지민 |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

김제후 | 제가 아주 작게나마 사회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요!

구찬희 | 의식주 의료 교육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경제정의를 위하여

화강윤 | 경실련 파이팅!

김태경 |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해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향후에 시민단체 활동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ice

전화번호 02-766-5627~5628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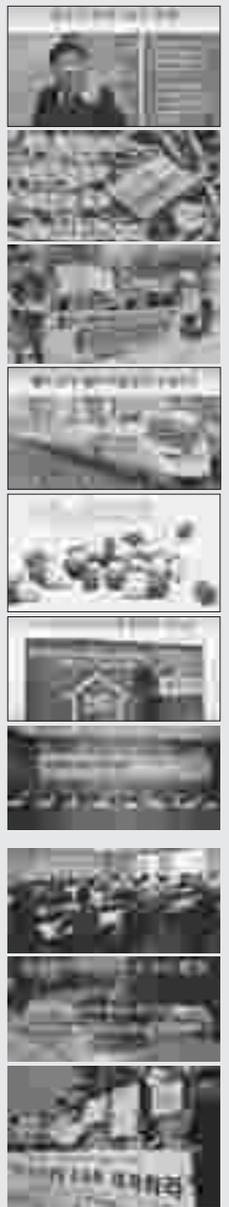


2017. 06

- 06.07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중단하라
- 06.08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위원을 해촉하라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반대의견서 제출
- 0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 06.14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 06.15 식약처 GMO 검출 라면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 06.16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 06.19 문재인 정부 첫 투기억제책 미흡하나 후퇴없이 꾸준히 추진해가야
- 06.20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통합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야한다
- 06.21 [기자회견]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약사 특혜만 고려한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반대
- 06.22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 06.30 '투기세력과 전쟁'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할 5대 부동산개혁 과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2017. 07

- 07.04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07.05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입장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07.06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 07.10 사법개혁 필요성 드러낸 '레인지로버 판사' 뇌물죄 무죄 판결
- 07.11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검찰은 수사에 즉각 나서라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 07.12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529명, 가입일: 2017년 5월 11일~2017년 7월12일)

(사)녹색교통운동	김공태	김승하	김현아	박미화	박태순	신상헌	유연삼	이승근	임상혁	조부근	하윤진
www.녹색교통운동	김기보	김승현	김현정	박민수	박현주	신선철	유영길	이승협	임영희	조선익	하재현
강대수	김기철	김승호	김현철	박민진	박항우	신영철	유재경	이용근	임은경	조승환	하현진
강두현	김기환	김연미	김현희	박병만	박희권	신용준	유진상	이용운	임재환	조연성	한상일
강영근	김나영	김영수	김형균	박빈호	반영철	신인철	유한양행	이원관	임훈	조우현	한성욱
강백현	김남수	김영대	김형표	박상현	방상윤	신정미	유현숙	이윤선	장두호	조재호	한태경
강성규	김대래	김영미	김혜진	박상현	배도경	신태철	유형래	이윤숙	장삼수	조주희	함도용
강성중	김대진	김영수	김호경	박상형	배병달	신현택	유호성	이은재	장욱	조현성	허도한
강완정	김도완	김용술	김황현	박상희	배보현	심영숙	윤경효	이응도	장운정	조현웅	허동일
강운숙	김도형	김용원(2)	김훈	박석순	배장동	심정환	윤영	이인경	장재영	조현익	허윤범
강인중	김동승	김용재	나기열	박석현	백경아	심준신	윤상연	이재성	장찬홍	주인권	허호
강창훈	김동우	김우영	나순팔	박선규	백원중	심진섭	윤성미	이재운	장홍석	주진혁	현철재
강철	김동한	김윤섭	나영희	박성순	백종효	안경래	윤여림	이재임	전상용	지동섭	홍기홍
강태연	김동호	김은경	나일주	박성원	법무법	안기영	윤용석	이정남	전선임	지상수	홍영근
강태철	김동환	김은섭	남기욱	박성호	인문무	안재경	윤용선	이정아	전성훈	지영근	홍성범
고봉재	김민기	김인봉	남상길	박세중	변정흠	안태희	윤재권	이정임	전중찬	지유석	홍성원
고성순	김명호	김인철	남세진	박승언	보령제약	약탈경재단운동	윤재석	이정행	전찬일	진성희	홍성진
고영일	김몽룡	김재열	남수희	박시근	서경원	양대권	윤종길	이정후	전찬일	진원석	홍성진
고유승	김미경	김재홍	노병영	박연환	서영기	양동요	윤준구	이제선	정규용	진중화	홍순갑
고은주	김민식	김정민	노상현	박영훈	서은정	양동호	윤지민	이종민	정동열	차경열	홍승우
고재인	김민연	김정석	노우성	박용제	서정임	양용배	윤창원	이종열	정박문	차상열	홍영희
고주현	김병주	김정선	노재원	박웅길	서정화	양우준	윤현철	이종창	정병일	차여준	홍우성
고창식	김병철	김정설	노종용	박원석	서준수	양원철	유희경	이종희	정병철	채대영	홍인표
고혜란	김보금	김정훈	노창수	박인수	서홍률	이재열	이경락	이주현	정복근	천민열	홍종화
고효중	김봉규	김제후	노화정	박인현	선우인내셔널	여수정	이경민	이준모	정성남	천일수	화강윤
공공운의로연대	김삼철	김종석	대원제약(주)	박재성	선월몽산	염진형	이경필	이지은	정성희	최광석	황광열
공병준	김상덕	김종익	동영건설(주)	박재성	성외경	염현	이경환	이종재	정애진	최광용	황덕자
구강운	김상래	김주규	류양석	박재환	성욱진	영남이공대학교	이경희	이충현	정연옥	최기환	황선영
구찬희	김상범	김주성	류중렬	박재희	소순창	예병렬	이광열	이태준	정영옥	최낙신	황성남
권기대	김상열	김준영	문은경	박점수	손기훈	오경아	이근조	이필근	정용수	최민경	황이남
권순탁	김상용	김준현	문정열	박정림	손성국	오동욱	이근주	이하인	정윤채	최상원	황인
권용습	김석기	김지만	문종철	박정선	손세욱	오세웅	이대열	이학용	정은선	최석근	황현석
권용희	김선욱	김지웅	문현국	박정수	손원우	오승암	이대윤	이한범	정익훈	최세환	황훈주
권혁경	김선희	김진	문화정	박정은	손정근	오창훈	이대혁	이한주	정일용	최승우	황희정
권혁근	김상수	김진경	박경복	박정표	손태준	오현석	이덕영	이해희	정갑식	최영국	황희정
권현덕	김상식	김진영	박경수	박중선	송경열	오현철	이동진	이행섭	정재영	최영환	황희정
금동섭	김상식	김진화	박경원	박중원	송덕원	오형열	이만희	이현미	정지원	최완규	황희정
김기형	김성용	김창영	박관우	박진경	송민영	왕진산	이상도	이항일	정진선	최윤규	황희정
김갑수	김성욱	김찬수	박광태	박진호	송요찬	우여동	이상문	이혜숙	정하용	최정욱	황희정
김건호	김상철	김태경	박근용	박창욱	송희복	우흥주	이상벽	이호섭	정혜승	최지원	황희정
김경낙	김성호	김태우(2)	박금순	박철인	송합근	원두영	이상복	인치승	정화영	최진욱	황희정
김경덕	김세준	김태호	박기서	박철주	송현숙	위평량	이석구	일동제약(주)	조광현	최철호	황희정
김경생	김소윤	김택성	박달현	박창환	송홍석	유경희	이숙일	임경아	조대영	최혁	황희정
김규영	김수현	김필관	박동렬	박춘건	신봉진	유방실	이순용	임광재	조동욱	충북청주경찰서	황희정
김금숙	김순관	김혁	박영환	박춘호	신상준	유승중	이순한	임병오	조명제	코오롱제약(주)	황희정

중앙경찰서	공정표	김경수	김명임	김성훈	김용하	김종근	김천수	김호균	문은경	박성훈	박중소
(사)녹색교통운동	공진하	김경수	김명철	김세정	김용호	김종덕	김철	김호성	문인섭	박세권	박중원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공태영	김경아	김명환	김세준	김우비	김종록	김철주	김호식	문정협	박세원	박주은
	곽기훈	김경준	김무준	김세중	김원석	김종목	김철호	김호연	문차호	박수형	박준수
	강경수	곽복률	김경철	김문환	김세진	김원태	김종민	김철홍	김홍관	문태현	박순기
	강내원	곽새별	김경환	김미자	김소라	김유룡	김종배	김철환	김홍규	문현정	박승배
	강덕순	곽지용	김관영	김미진	김소희	김유신	김종석	김총환	김홍업	민남미	박승상
	강마아	곽효석	김관용	김민수	김수영	김유진	김종섭	김치수	김황현	민병욱	박승언
	강명구	곽희남	김광배	김민주	김수현	김유찬	김종우	김태균	김효선	민선욱	박승욱
	강문희	구강운	김광수	김병각	김숙희	김유환	김종익	김태균	김효원	민수영	박승진
	강민구	구경이	김광현	김병구	김순관	김윤기	김종찬	김태수	김훈	민회숙	박승제
	강선미	구흥마을공동체활동조합	김광훈	김병수	김순임	김윤두	김종혁	김태수	김희연	박건영	박영규
	강성규	구성찬	김국주	김병수	김승보	김윤석	김주목	김태완	김희철	박경복	박영규
	강성일	구수정	김근수	김병수	김승호	김윤식	김주성	김태중	나권일	박경서	박영기
	강원호	구은경	김규범	김병주	김시연	김용	김주영	김태진	나민찬	박경준	박영남
	강은현	구자범	김규훈	김병철	김시원	김은경	김주영	김태현	나병현	박광현	박영민
	강일환	구찬희	김근수	김병학	김양규	김은경	김주중	김태현	나상민	박근용	박영민
	강주현	권경무	김근철	김병호	김양수	김은경	김주현	김태형	나소희	박기영	박영수
	강지영	권규향	김근초	김보경	김양진	김은섭	김준	김태형	남기원	박기철	박영웅
	강지현	권기범	김기숙	김보금	김영수	김은영	김준배	김태호	남삼권	박기훈	박영철
	강창길	권동현	김기열	김보라미	김영대	김인곤	김준식	김태호	남세진	박남규	박영환
	강창구	권득용	김기철	김보람	김영미	김인숙	김준영	김태훈	남원호	박노건	박용석
	강창교	권봉철	김나영	김복환	김영섭	김인영	김준호	김태훈	남재길	박동렬	박용정
	강창훈	권삼용	김남덕	김봉진	김영수	김인태	김지연	김평진	남현주	박두영	박용준
	강철규	권상현	김남훈	김삼용	김영순	김일수	김지영	김하양	남호원	박만철	박우석
	강철승	권순남	김대균	김상경	김영실	김재구	김지용	김학수	노연경	박미나	박용길
	강태구	권순범	김대래	김상균	김영은	김재구	김지현	김하나	노재훈	박미라	박원규
	강태호	권순식	김대선	김상래	김영은	김재길	김지혜	김해성	노정호	박미선	박윤수
	강현신	권순용	김대성	김상영	김영일	김재일	김지호	김현동	노진주	박민준	박은아
	강혜정	권영준	김대중	김상용	김영재	김재하	김진구	김현덕	노해룡	박병오	박은현
	강규현	권영진	김대진	김상우	김영주	김재화	김진만	김현석	노희철	박병일	박응순
	경민수	권오진	김대현	김상중	김영준	김재환	김진명	김현성	리은솔	박보성	박의용
	계충미	권용우	김대호	김상현	김영준	김정국	김진섭	김현수	류도암	박빈호	박인선
	고강석	권윤정	김대훈	김상희	김영철	김정돈	김진수	김현정	류동훈	박삼중	박인현
	고경일	권윤희	김도환	김생수	김영출	김정선	김진아	김현정	류시문	박상희	박재갑
	고봉재	권일민	김동승	김서현	김예승	김정수	김진영	김형규	류지성	박상기	박재성
	고영희	권준기	김동영	김석환	김원래	김정신	김진현	김형균	류형욱	박상대	박재완
	고윤	권준석	김동우	김선필	김원배	김정욱	김진호	김형균	류희근	박상렬	박재익
	고은진	권준우	김동욱	김선화	김원욱	김정원	김찬동	김형조	마경화	박상성	박재환
	고재인	권찬	김동욱	김성래	김용남	김정현	김찬석	김형준	마미영	박상인	박정교
	고정희	권철민	김동진	김성민	김용석	김정호	김찬형	김형진	맹성렬	박상희	박정민
	고지석	권혁경	김동환	김성수	김용섭	김정호	김찬호	김혜경	문경식	박서희	박정석
	고창식	권혁민	김래관	김성일	김용숙	김정호	김창균	김혜숙	문광기	박선희	박정식
	고행산	권현덕	김만수	김성중	김용식	김정훈	김창범	김혜순	문상준	박성배	박재화
	공공운수	김경모	김만호	김성태	김용직	김정훈	김창식	김호	문세진	박성용	박중근
	의료연대	김경민	김명균	김성태	김용철	김제후	김재윤	김호	문세영	박성정	박중석
	공병욱	김경배	김명기	김성필	김용태	김종걸	김천	김호경	문소상	박성혁	박중선



배종석	소소창	신은정	양창우	유재민	이경숙	이상열	이영현	이주하	임웅찬	전상룡	정정래	조진수	최성훈	한상운	황민호	도시개혁센터	양우현	서경수	김종구	정명자	서은주	한샘경생협	김판희	
배천호	소진성	신인철	양태훈	유재욱	이경우	이상룡	이영호	이주형	임은경	전상욱	정제용	조진오	최수진	한상훈	황선용	윤재용	신희권	김주호	정승훈	송문길	홍용표	김필성		
배흥진	손건일	신정무	양혁승	유재혁	이경중	이상문	이용만	이준모	임장원	전성철	정종원	조현용	최수진	한석웅	황선원	고일두	이동근	심제원	김진영	정찬현	송민석	홍진원	김한기	
백경아	손관구	신지영	엄원중	유종성	이경태	이상범	이용배	이준영	임정규	전성훈	정주연	조형익	최승선	한선아	황성남	곽도	이만희	유주상	김창석	조광환	송재석	황은남	김현호	
백승진	손무길	신철영	여해경	유진상	이경환	이상복	이용선	이지영	임종필	전영진	정주연	조형준	최영식	한성욱	황신영	곽충삼	이명수	이대순	김태환	주석부	신미영		김효영	
백요한	손봉호	신태철	염규석	유평준	이경희	이상엽	이용승	이지훈	임창빈	전용배	정준수	조희근	최영환	한소람	황영미	구지훈	이병준	이덕우	김학성	차승주	신상진	거제경찰서	김효일	
백정숙	손성민	신현택	오경준	유해신	이곤섭	이상엽	이용한	이진경	임태영	전용일	정중식	주상희	최은아	한승구	황유경	권영진	이순배	이명근	김형만	최우진	신승춘		나기석	
백종무	손성일	신현호	오상엽	유항임	이광섭	이상우	이운향	이진영	임희청	전우영	정지원	주익철	최완규	한승호	황이남	권용우	이양재	이순기	노귀남	최평규	심규만	강경수	니양주	
백종효	손승태	심순혁	오상준	유혜영	이광택	이상윤	이원식	이진원	장경완	전장호	정진민	주정운	최원영	한승호	황이숙	권일	이유미	이영길	당명숙	최호창	심문보	강성배	남기원	
백진현	손재운	심인석	오세웅	유희동	이광필	이상윤	이원재	이창섭	장경태	전천호	정창률	주찬식	최원천	한연하	황인구	김경희	이은재	이지연	문행규	추재훈	심재상	강운영	남덕희	
법무법인 문무	손정아	심충진	오세정	유희숙	이광현	이상진	이원재	이창엽	장동민	정경옥	정창운	지동익	최유영	한연관	황인선	김광만	이재문	이진	박경서	한광수	심현섭	강정숙	남원식	
변동철	손종보	심해정	오세호	윤건수	이규용	이상진	이원희	이창효	장문호	정광화	정대근	지상수	최윤규	한용석	황인찬	김금옥	이정식	이창수	박금혜	한정훈	양창훈	강정효	남희정	
변상해	손태준	아름다운의원	오순택	윤경로	이규철	이상철	이유열	이창희	장미은	정덕임	정대명	지영석	최윤재	한용환	황정국	김기성	이주희	이태호	박성극	한준구	원경숙	강지은	노재남	
변수원	손호중	안경숙	오승암	윤경숙	이규혜	이상현	이윤규	이철우	장민수	정동영	정대성	지용태	최은식	한종우	황철진	김덕기	이창수	장영	박은주	홍영근	윤도현	강학도	노재천	
변재근	손희준	안규창	오승훈	윤경효	이균성	이상희	이윤배	이춘수	장병호	정만중	정대완	지정희	최은진	한홍열	황호식	김도영	이현주	장윤정	박준우	황대중	윤성원	거제시농협조합	류금렬	
변창우	송경열	안기정	오용식	윤기복	이근식	이석규	이윤상	이춘재	장보름	정명훈	정택수	진영수	최은철	함동균	황효열	김동식	이희승	장진영	박준형		윤순모	경명자	문상필	
변창흠	송기민	안병억	오장환	윤득구	이근주	이석기	이윤호	이태영	장삼수	정명채	정해석	진유식	최인숙	함두호		김미경	임경수	전종찬	배인교	강릉경찰서	이광중	고영주	박광호	
서경호	송기성	안병준	오재명	윤영	이근태	이석범	이은재	이태용	장석림	정미숙	정혁제	차여준	최인호	함성훈	경제정의연구소	김석기	임영희	정경수	배종근		이귀녀	권민호	박대기	
서순탁	송다겸	안영훈	오중현	윤상균	이근환	이석제	이응도	이태진	장석춘	정박문	정혜승	차은상	최일	함형욱		김성수	임창규	조영관	백인용	고석태	이규송	권순옥	박영욱	
서승완	송미영	안완용	오창훈	윤숙자	이금희	이석진	이의영	이학수	장승진	정병순	정혜승	차진구	최장원	허남중	강명철	김세웅	임형백	조현	서관승	고재정	이숙희	기산종합건설(주)	박성호	
서영덕	송민영	안윤식	왕경희	윤영근	이기송	이선신	이인경	이한길	장심영	정병오	정화영	채민성	최재용	허병권	곽수근	김영	정명진	전은호	하성용	신경화	권성동	이윤일	김경수	박순옥
서완석	송병록	안인화	우여동	윤영천	이기우	이성구	이인영	이한민	장영식	정병일	정희성	채원호	최종일	허수범	김소연	김재익	정성훈		신영옥	권오석	이정임	김대봉	박애숙	
서윤석	송용석	안중범	원동환	윤용선	이기호	이성복	이장희	이해희	장영오	정상미	정희창	채홍석	최준용	허원철	김지환	김종길	정애리	통일협회	신종성	김남두	이재영	김민수	박용안	
서은경	송원기	안지현	원영진	윤은선	이낙원	이성재	이재길	이현미	장영철	정석희	조강희	천대웅	최준혁	허익배	김혁	김철홍	정인환		안춘훈	김남영	이주석	김삼기	박근근	
서정일	송은우	안진걸	원재환	윤은주	이남경	이성형	이재길	이현석	장영환	정선애	조건영	천민승	최종길	허정준	노영록	김태호	조돈철	강만성	위정희	김동영	이지은	김삼일	박준기	
서정임	송인섭	안철원	원종호	윤인오	이다혜	이소영	이재성	이현재	장용근	정선철	조경민	천병우	최지한	허중호	문인철	김형욱	조재형	강은석	윤영전	김봉래	이진아	김석준	박추홍	
서종대	송인윤	안현구	원혜영	윤일성	이대영	이승수	이재욱	이형세	장욱	정선혜	조광희	천세완	최지현	허지영	박상안	김호현	최강림	강화명	윤태룡	김석래	이효숙	김선심	박태원	
서종철	송인철	안호원	위평량	윤재권	이대혁	이수연	이재완	이호경	장원규	정성봉	조규홍	천승걸	최지훈	허호	백승호	나인수	최두호	고석주	이기자	김선정	장선애	김성진	반영진	
서직원	송재경	안효정	유관영	윤정섭	이덕희	이수영	이재운	이호섭	장원택	정세진	조대영	천일수	최창배	형성훈	백종효	노두승	최명철	고유환	이승규	김재부	전병욱	김세린	배기수	
서한송이	송태교	안희숙	유기석	윤종빈	이동석	이숙일	이재운	이호욱	장유리	정세훈	조명제	최광규	최창호	홍광선	성호준	노웅래	최윤정	곽일환	이우영	김재준	전영권	김수현	배동주	
서흥률	송포명	안희정	유기찬	윤종호	이동석	이숙희	이재은	이화영	장유환	정승상	조병익	최광현	최철화	홍대식	손창민	도선봉	최정우	권수복	이익현	김정근	정광민	김순옥	백세정	
석기영	송하동	안희철	유기창	윤준구	이동엽	이순기	이재임	이화주	장은미	정승준	조성태	최근현	최호영	홍도천	송운학	류성룡	하동익	김근식	이장한	김중남	정석중	김승권	백순환	
석철수	송현숙	악탈경제비대운동	유기현	윤종식	이동주	이순배	이정규	이훈	장중철	정승화	조성희	최다니엘	최홍엽	홍미미	여은미	류중석	함승희	김동규	이점호	김진욱	정의호	김양곤	서주중	
선동수	신동민	양광회	유남식	윤지원	이동준	이승대	이정남	이희중	장찬홍	정연섭	조성희	최덕천	최희수	홍성균	윤언철	민범기	김민식	이정우	김진욱	정의훈	김영우	손성미		
선우인터내셔널	신동애	양대권	유덕열	윤진철	이동한	이승섭	이정성	임건묵	장철기	정연욱	조순열	최덕호	최희수	홍성범	이덕호	박경남	시민권익센터	김병조	이중수	김태희	정의훈	김영우	손성미	
선일동산	신동엽	양대규	유동진	윤창원	이동호	이승우	이정자	임경아	장형환	정연태	조순홍	최명희	최희준	홍성환	이승훈	박상위	김삼수	이진만	김형경	김형경	정현석	김용운	손은희	
선종국	신동조	양동요	유록수	윤한필	이만호	이승협	이정현	임영호	장혜령	정왕규	조연정	최민	추동균	홍순갑	이혜란	박상우	김강준	김성호	이현희	김형근	조우현	김원용	손정식	
설원식	신동진	양두석	유명진	유효상	이명진	이시연	이정후	임병락	장홍석	정용화	조용기	최범식	크레텍책임(주)	홍순영	임효창	박영웅	김상현	김용현	이화용	김환식	진수환	김잠이	손진일	
설창인	신두철	양석영	유병상	윤희경	이명천	이신호	이정희	임병오	장희곤	정운수	조은호	최병오	판문	홍승우	정길재	박정윤	김석기	김은수	임명선	노영성	최규천	김정주	송수영	
성광식	신봉기	양성범	유송	음유정	이명훈	이애화	이정희	임상규	전기호	정원철	조일흠	최봉문	프리임인드스트레(주)	홍중학	정홍준	박찬우	김영미	김창철	임홍승	박성덕	최복규	김중태	송오성	
성금성	신상진	양세영	유연식	이갑수	이모세	이영란	이종규	임서구	전대홍	정원희	조재연	최상원	하상준	홍준표	천미림	박희정	김태룡	김재기	장인석	박운남	최승길	김중혁	신미경	
성병화	신영철	양연식	유연희	이갑수	이범재	이영범	이종길	임석규	전명석	정운영	조정근	최석준	하용호	홍준현	최재윤	배용규	김현아	김재원	장형원	박인재	최승희	김중현	신미애	
성신	신영철	양은학	유인상	이강운	이병관	이영욱	이종범	임성희	전병순	정인호	조종철	최성수	하재연	홍진구	하능식	서민호	나태균	김정웅	전귀정	박종시	최승룡	김철관	신부연	
성윤숙	신완기	양원표	유인환	이건호	이봉숙	이영을	이중수	임세은	전병식	정일용	조준범	최성실	하현아	홍창기	홍창식	서순탁	대호관세사법인	김정진	전미옥	박지호	최은송	김창집	신용호	
소경섭	신용규	양윤숙	유일용	이경도	이봉형	이영중	이중윤	임영환	전봉양	정재은	조준형	최성주	한샘경제연구소	황경복	황은경	신행숙	박병식	김정현	전영선	반태연	최종문	김중근	신진홍	
소세영	신우현	양인준	유재경	이경수	이봉훈	이영재	이중은	임용기	전봉진	정재진	조진만	최성현	한바름	황기명	황정호	심재민	박인동	김제천	정동욱	배정순	한동준	김판열	신찬숙	



안미나	최삼주	김태걸	이수우	강성철	김윤권	박승원	심해진	이원영	철산성당	김기홍	박상원
엄수훈	최선종	김태열	이수향	강신재	김윤옥	박영훈	안경애	이운식	최경화	김길현	박성수
여정애	최쌍중	김혜숙	이영화	강옥영	김윤재	박옥남	안철환	이은경	최문교	김남수	박수인
오성관	최운용	김현근	이운주	강옥희	김윤호	박은경	양금석	이은영	최미곤	김동현	박양우
오성주	최윤숙	김현철	이유형	강윤숙	김은진	박재철	양기대	이은재	최미영	김문수	박옥란
옥근호	최정환	김형수	이인형	강주례	김재성	박재희	양승오	이재춘	최상철	김미남	박웅
옥방호	한기수	김형환	이정윤	강찬호	김정	박정선	양정현	이정희	최철규	김병철	박이화
옥충석	한은진	김흥기	이종대	강희규	김정숙	박정옥	양철원	이중석	추규호	김상국	박정열
옥혁수	한인숙	도형수	이지애	고영원	김종임	박종기	오명희	이현우	티제이티(주)	김성일	박종근
우정숙	한장용	마태근	이창안(철우스님)	고완철	김종진	박종미	오민석	이혜수	하숙례	김수영	박종렬
원순실	함미경	문성현	임보향	고재원	김진경	박주한	오성남	이혜진	한공희	김순재	박준근
원종태	허주구	박귀룡	장은주	고형복	김진숙	박준서	우동훈	이호석	한상미	김양두	박찬숙
유차상	허희경	박봉찬	전용범	곽도훈	김탄일	박진기	우병설	이호열	한운선	김양지	박창기
유천업	현정임	박성민	전진대	곽은	김학준	박진석	원범재	이호성	한흥기	김영규	박창수
유태영	홍성태	박성준	정병열	구교형	김현정	박춘선	유수연	임심례	허기용	김영길	박창현
윤강원	황분희	박옥선	정복근	구차환	김현정	박태준	유현지	임진희	허정호	김영환	박철웅
윤길정	황점득	박용대	정석호	권도형	김현희	박형근	유홍우	장영기	허중은	김용태	박태규
이경희	박임관	정연권	권순남	김해정	방소현	윤문선	전광섭	허창순	홍은선	김일술	배백호
이신학	경주경실련	박지영	정용욱	권혁이	김효숙	배권식	윤승형	전종석	홍은선	김일술	배웅태
이상귀		박찬진	정훈영	금강정사	김희수	배덕현	윤종미	정도환	홍진호	김일호	백석
이상미	강명근	박지만	조덕수	김경태	남기표	배준	윤진원	정민정	황동식	김재석	백석세무회계사무소
이상천	고주현	박태광	조영화	김경표	남윤화	변미애	윤철	정병오	황인란	김재중	백익순
이성호	곽정섭	반정희	지병구	김경화	노병일	변한주	이강순	정상영	황재연	김재찬	백종기
이숙자	권기흠	배익용	최민경	김기영	노신복	서방자	이금숙	정선유		김정훈	비스조합
이양식	권오현	배철용	최병철	김남권	노용래	서복원	이기영	정애숙	광주경실련	김종재	변동철
이외자	길종구	빠드차르갈	최삼호	김남현	노혜숙	서삼례	이길숙	정은영		김주현	변원섭
이은경	김경대	서선자	최성희	김남희	노희준	서순자	이로사	정인에	(유)용진에너지	김지인	변재영
이장명	김경아	서흥기	최암	김다솜	류미숙	서용원	이말복	정중환	(주)대한가스산업	김철현	서민호
이장표	김경호	손성목	최인찬	김동범	류정희	서유리	이명숙	정지선	(주)영암마트	김해룡	서상기
이정택	김광진	손수호	최임석	김미란	마아인	서은경	이미경	정하준	(주)해양도시가스	김현	서상기
이종우	김구영	손영태	최정희	김민재	문종철	서이석	이미희	정학균	강대욱	김현오	서수연
이철용	김기석	손용락	최춘자	김봉화	민찬식	서태원	이민지	정해경	강신주	김현석	서정훈
이형로	김기종	송성수	최현익	김상미	박경옥	석학주	이병렬	정희균	강은섭	김현중	서해자
장길호	김동명	신수철	최홍배	김상열	박계량	성윤경	이병순	조경봉	강정미	김현철	선종아
장석주	김만규	심정보	최환호	김선호	박광수	성인숙	이병철	조범상	강현수	나미영	설상욱
전갑생	김몽룡	안재철	한동훈	김성자	박기은	손선주	이복자	조상희	고근	나병철	성인규
전기풍	김병수	양철영	한성우	김소윤	박문경	신가람	이부순	조이라	고려가스(주)	나성영	소범환
정보건	김보성	오영석	한순희	김수연	박미경	신동렬	이상봉	조은하	고려가스(주)광주	노회정	손점식
정석윤	김성우	오현욱	한옥련	김수진	박미영	신민선	이성숙	조태섭	고영삼	류한호	송광운
정선우	김연옥	왕서정	허남욱	김승복	박미정	신복인	이성진	조해성	고형석	명노민	송원식
정종화	김영식	우호식	황도연	김애란	박미화	신성은	이승재	조화영	공수현	모현숙	송윤주
조승재	김정제	윤병길	황진환	김연옥	박민관	신영옥	이승봉	조흥식	구희선	문정찬	송태석
조오현	김정호	윤정수	휴먼뱅크(주)	김영근	박민영	신윤철	이양희	주태진	권충화	박광복	송형일
조하영	김창호	이관	광명경실련	김영미	박복임	신은숙	이언주	지미선	기우태	박남규	신재안
지영배	김철년	이성수	광명경실련	김용관	박상윤	신해정	이연숙	진장호	김경현	박병규	신주환
진성우	김철수	이성민		김용길	박성배	신해진	이영신	차성미	김광영	박병기	심재훈
진휘재	김종로	이성조	(주)테리사이클링	김원선	박성영	심상록	이영희	차정은	김기보	박병일	안샘들

양동윤	이형호	최남식	김봉교	이명숙	강왕근	이경은	박상석	황인순	김성준	박종익	윤홍식
양명희	임가춘	최동기	김연고	이명희	고계곤	이광석	박영훈		김수원	박종철	이강태
양진환	임동훈	최성중	김요나단	이미경	고덕영	이상운	배건우	대구경실련	김승환	박준상	이경민
양해령	임성태	최영남	김윤희	이미숙	군산도시가스	이상춘	백종일		김신호	박진수	이경탁
엄창수	임숙경	최용석	김은희	이상도	군장에너지(주)	이석진	신명순	(주)남캐나다메이슨	김영권	박치상	이경화
여상구	임영범	최윤정	김인순	이상철	김영혜	이선덕	신상천	감신	김영모	박한승	이근원
오경례	임정훈	최정구	김재욱	이영애	물빛가운	이유설	심상용	강연환	김영두	배석운	이노수
오미정	임정휘	최주영	김재훈	이원재	박은아	이희재	안철환	경희창	김용찬	배은정	이미정
오승재	임종철	최진규	김중배	이원희	세종기획	임구원	안호열	계양엔진종합상사	김용철	변부형	이병화
오지혜	임한필	허주아	김종율	이정건	심규만	장순환	양영재	공영선	김운호	사정걸	이봉우
오지홍	임형채	한국메가저장업협동조합	김준희	이재수	양창진	정경조	어중석	공재식	김일부	사정욱	이부용
오치홍	임형철	한영석	김진익	이종률	영광자동차공업사	정태영	엄선덕	곽덕환	김재범	사종철	이상록
유방실	장의수	한샘	김진희	이창형	이현	조용석	오미애	곽동주	김정렬	성영락	이상천
유현	장익	한신구	김철광	이태동	장육남	조은정	오희미	구미대학교	김종웅	성윤상	이상필
윤두중	전재석	한원정	김현미	임은기	전강훈	조재용	웅심이칼국수	권기억	김종태	손광락	이상화
윤봉란	전창주	한희주	김휘연	임주석	조경민	차숙희	원용벽	권기혁	김지현	손상호	이선혜
윤봉영	전홍모	허기석	김휴진	장기태	최웅	최경용	유영록	권대우	김진호	손상흠	이성
윤영수	정강택	허문수	김희덕	장문석	한화에너지	최충식	윤영자	권동일	김창수	손수익	이상철
윤원진	정두숙	허성태	김희철	장세광	홍관표	하수진	이경화	권병훈	김천일	손승완	이연재
은광석	정병호	허탁	나효훈	장종길	홍기원	한성수	이경희	권오숙	김태선	송상수	이용세
이강천	정상문	형민우	노상진	장준우	호희국	이금순	이기형	권오준	김태수	송순임	이장수
이기만	정용완	홍영신	라병희	장홍성	군포경실련	이기형	권오집	권택중	김태우	송영식	이정웅
이길남	정원태	황덕자	박성도	전윤한	김포경실련	이두열	권택중	권휘동	김태환	신영섭	이종경
이동민	정은수	황동현	박성표	전재돈	곽윤열	이부형	권휘동	김해철	신홍권	이지영	
이명구	정일용	황보관석	박순이	전호갑	국정아	(주)신원센터카	이재홍	김성민	김현수	심병철	이진태
이봉주	정종현	황윤용	박응도	정재봉	권영훈	강명자	이정규	김강식	김호진	심준섭	이진현
이상걸	정진철	황주안	박재욱	정진수	김대욱	김남규	이정수	김경민	나승춘	안영석	이진희
이성각	정찬용		박정구	정택균	김동별	김두관	이종기	김대식	남동강	안희석	이창건
이성근	정혜경	구미경실련	박주영	정택동	김석현	김문경	이종준	김대진	남동환	안희석	이창용
이성길	정혜련		박형진	조경래	김연승	김미자	이종재	김도영	남윤환	양우준	이해숙
이승노	정환채	강명천	백승국	조현수	김영수	김영로	임학현	김도환	남민철	양원규	이형태
이연	조광득	강승수	변창우	지대근	김영희	김옥순	정일환	김도형	노영희	엄봉훈	이희영
이영기	조교영	강신용	스핑진	최근애	김종수	김용훈	정희상	김도형	노윤경	엄인용	임성준
이은방	조선익	고영호	송장호	최낙렬	김창호	김종열	조승현	김동식	동영건설(주)	에스제이건설(주)	임종오
이을용	조성식	구지근	송철원	최선호	김희모	김준현	조용문	김동일	류규하	여우현	장석희
이인수	조인형	권구일	신미정	최연호	박윤춘	김진희	조용문	김동철	맹일영	여은상	장우석
이재길	조재곤	권보	신주식	표상욱	박정민	김창집	조종석	김명수	문인수	여택동	장은숙
이재석	조현지	권순서	심재필	하영백	박충수	김형창	주석배 대한인간지배	김영혜	문호상	영남이공대학교	장철규
이재윤	주경남	권윤택	심정규	허진	박평식	남기후	채신덕	김무중	박경욱	오경학	장해열
이정근	주호연	길윤옥	양진오	홍인수	박희찬	남익선	최영미	김문한	박동균	우동락	장호경
이정량	지명순	김호양	엄상섭		군산경실련	송정복	류문식	한성식	김민식	박병준	유성근
이정주	지병근	김경훈	오영재		(주)김장독	심재숙	문현미	한혜경	김성돈	박승철	유영환
이정확	차현승	김낙관	윤달근		(주)제7두개량사업소	안중호	민경환	허우섭	김상진	박영식	유영근
이중성	채인기	김도형	윤상훈		100인경관객투수협회	양해택	박광근	홍석만	김선왕	박은영	윤태우
이중택	천재영	김동욱	윤중석		OC(주)군산공장	유애순	박병돈	황인문	김선희	박종률	정경선
이진화	천형욱	김문환	이관순								
이학균	천홍석	김보준	이덕수								



정문정	(주)마루농산	김현초	안중훈	전국진	목포경실련	문영덕	신주환	정평국	강삼옥	김미향	김용원(2)	김해몽	박복수	서범수	신용삼	육진우	이만수	이종석	전현수	정해영	최성관	강석태	김영식
정성윤	(주)한미푸드시스템	김현하	오세윤	전영춘		문웅	심재경	정혜수	강성태	김백철	김용필	김해영	박상수	서봉원	신용현	왕인	이명식	이종원	전호열	제미경	최수영	강신길	김영아
정연옥	강다은	김형태	오세현	전혁구	(유)편의식물종자사업단	문준석	안영하	정호원	강시명	김봉곤	김원태	김현옥	박석원	서수금	신유천	우명자	이미경	이종철	정광현	조래영	최승환	고돈일	김영호
정영모	강명자	김해천	오원관	정대용	강남길	민경준	양명희	조기석	강예윤	김병기	김유경	김현재	박선아	서양수	신이건	우성철	이민호	이종학	정권영	조명래	최원석	고선창	김용일
정영은	강병규	김홍숙	오종섭	정상배	강병국	민헌홍	양승희	조상국	강유동	김병용	김유석	김형권	박성수	서은정	신인철	우정용	이병기	이주현	정규용	조명제	최원용	고영진	김원기
정은숙	강재규	농협(사)법인 호한새(농)주	오학석	정상훈	강병조	박강일	양영주	조성익	강인중	김병하	김윤영	김형균	박성철	서종석	신정희	원허	이병진	이주환	정근	조민주	최은주	고인선	김원일
정재근	고나현	도남선	우금옥	정상희	강성태	박광배	양판승	조순형	강정규	김보열	김은숙	김혜경	박성호(2)	서창근	신철성	원희연	이병호	이준승	정기섭	조상현	최재명	고종문	김유경
정제영	구범림	명을식	원용철	정승래	강영태	박근영	어성준	조영교	강주하	김복준	김은영	김혜경(2)	박성훈	서현수	신승기	유명길	이봉진	이진수	정달식	조상희	최재호	고현주	김유리
정창길	권은남	문경재	유배근	정예성	강제석	박문옥	오승주	조용호	강종묵	김봉국	김인한	김호범	박승제	서현식	신해승	유수윤	이상구	이진수(2)	정도영	조양래	최정묵	공정관	김은희
정태안	권철명	문정수	유병연	정우택	강주천	박석일	오형열	조준범	강태문	김봉규	김인환	김홍재	박시우	서효정	신항남	유원식	이상미	이창희	정동만	조영규	최준식	곽병용	김인섭
정희교	김기남	박경오	유병한	정은선	권인철	박성일	원요준	차경아	강필원	김부근	김장섭	김홍태	박영봉	석승희	신현무	유재기	이상백	이창재(경성유업)	정동열	조유규	최진욱	곽중환	김일환
조락현	김기범	박근영	유인규	정인구	김경옥	박성진	유경생	천병식	강현주	김분이	김재명	김홍취	박영현	석진열	신해숙	유재엽	이상진(2)	이춘구	정동영	조용언	최찬규	길목	김재학
조방희	김길순	박기남	유인수	정중훈	김경철	박세훈	유광호	천재관	강형숙	김삼문	김재일(2)	김훈	박용주	석태호	심미예	유재중	이상득	이학봉	정말순	조용한	최철원	김 철	김정식
조상제	김동선	박기용	윤주병	정현재	김관옥	박소영	윤치술	천현중	경규성	김삼수	김재찬	김훈태	박용한	선석렬	심상조	유정기	이상현(2)	이현민	정명길	조유창	최해경	김경석	김정아
조용원	김동철	박성훈	이건희	정희대	김광배	박승춘	이덕일	최영숙	고영석	김상길	김재훈(2)	김희곤	박재본	설광석	심성구	유정동	이선희(2)	이현우	정명식	조윤득	최희원	김경순	김정인
조인지	김명경	박성원	이계자	조성천	김광창	박순옥	이도홍	최병기	고인홍	김상배	김정량	남경태	박재욱	설호석	심윤정	유재현	이성권	이현재	정명희(2)	조윤환	탁영민	김경아	김정환
조정학	김명제	박성진	이광자	조용석	김기권	박승채	이명희	최연식	고재일	김상옥	김정민	남기찬	박재현(2)	성덕주	심인섭	윤강훈	이상열	이현주(3)	정문수(2)	조은정	하나연	김계남	김정훈
조진현	김명주	박영순	이광진	조윤제	김대근	박승옥	이문희	최안수	고정연	김상태	김정수(2)	남영현	박재홍	성병창	심형철	윤경만	이성형	이훈진	정미경	조종석	하상철(2)	김나영	김종담
조찬호	김병국	박종대	이동민	조은호	김명숙	박영용	이범수	최일	공병승	김상호	김정숙	노경조	박정구	성영미	심해인	윤기혁	이성훈	이희길	정미한	조지혜	하성훈	김남춘	김종윤
주태환	김상환	박준혁	이문지	조철휘	김명진	박용묵	이병채	최재경	곽원병	김석준	김정순(2)	노상훈	박정숙	손병열	이영아	윤나영	이성희(2)	이희진	정민재	조홍규	하순금	김덕용	김주철
진연수	김성민	박희조	이범규	조항범	김명철	박인웅	이상권	최중영	구명중	김석호	김정택	노영욱	박종덕	손봉주	안기영	윤삼미	이순정	임무진	정상문	조호제	한국올타리공업(주)	김동수	김준섭
차진근	김성용	방영덕	이병승	조해형	김문재	박정석	이성로	최호길	구주영	김선년	김정현	노일용	박중수(2)	손상용	안명석	윤상현	이승우	임우택	정순영	주수현	한기성	김동순	김진태
최동학	김양호	방정희	이상일	주정봉	김민희	박정희	이인수	최환석	구효송	김선미	김중곤	도한영	박주원	손승용	안문상	윤석준	이승호	임중수	정순일	주식회사사무학	한병무	김말순	김진태
최우곡	김영기	배동국	이승용	중앙로1번	김보현	박종두	이재광	하상복	국희원1	김선희	김중구	류강렬	박진성	손영일	안병록	윤석진	이시화	임호	정신모	주안나	한병철	김명섭	김진희
최원아	김영주	백정용	이영수	가운영위원	김상원	박종범	이재성	한상호	권명섭	김성권	김중기	류위훈	박찬일	손원우	안연균	윤성미	이영갑	임훈	정애니	주영숙	한성국	김명욱	김진희
최은영	김영희	서동국	이용훈	화-정인수	김선실	박종철	이정진	한승주	권범현	김성근	김종민	류은영	박철중	손정현	안원하	윤수성	이영신	장귀봉	정영점	주재민	한성안	김문석	김천수
최종만	김욱	서영석	이윤숙	진동규	김성두	박주이	이종화	한태연	권오성	김성길	김종한(2)	류종성	박철한	손창욱	안원호	윤영태	이영호	장다감	정용성	지경아	한영수	김미정	김철수
최준호	김원희	서영환	이윤희	진동섭	김성철	박창수	이찬식	홍건숙	권재현	김성수	김주영	류진호	박태주	손창우	안재민	윤재성	이옥형	장문숙	정용수	지은아	한재철	김병욱	김철환
최지원	김은주	서재열	이인세	차정민	김수경	박창윤	이천호	홍국선	권태성	김성열	김주현	모상선	박한규	손치훈	안종일	윤재철	이용주	장문정	정우진	진동식	한중석	김부석	김춘식
최한경	김용배	서정원	이재민	최경호	김승호	박철수	이철수	홍근표	김가야	김성춘	김주호	문규성	박현욱	송미경	양대건	윤지영	이원경	장봉주	정은선	진수진	허민도	김상기	김충남
최한석	김인철	서형호	이재영	최경훈	김신규	박한호	이한경	홍석준	김갑환	김성태(2)	김주희	문상철	박희영	송순임	양동열	윤현철	이위덕	장성호	정장한	진효상	허진욱	김선일	김태균
하경태	김재경	성기석	이정(버리푸드)	최낙구	김영태	박해령	이한중	홍순길	김경일	김성호(2)	김준기	문상철(2)	박희정	송원섭	양시경	이갑준	이은진	장영철	정재동	차동박	허해녕	김선철	김태영
하순화	김재석	손대근	이정구	최미경	김예영	박혁진	이형오	홍진표	김경조	김성훈	김준환	문윤순	방성애	송은주	양원석	이강진	이은화(2)	장윤석	정재호	차동욱	한지훈	김성권	김형걸
한상인	김종선	송영환	이종범	최봉문	김정민	박현희	이형완		김경택	김성훈(3)	김지만	문재천	배광호	송재광	양은진	이경학	이울찬	장은선	정종학	차진구	홍경자	김성근	김형기
허남렬	김종하	송유숙	이철은	최윤석	김정아	박해영	이홍성	부산경실련	김광식	김수미	김진	문준호	배성훈	송재은	양재화	이광열(2)	이일용	장재구	정종화	차창호	홍봉선	김성미	김호준
허인설	김주홍	송인걸	이학재	최장환	김중숙	박홍식	임종석		김길수	김수빈	김진영	민지훈	배수미	송정숙	양중철	이귀순	이재정	장준흠	정지원	천상수	홍일표	김성욱	김희근
홍희청	김진숙	신상현	이해정	최정우	김종익	배상기	장미	(주)경성에너지	김남식	김수자	김진찬	박경주	배용준	송종두	양중필	이규현	이재호	장지태	정진걸	천응욱	황국자	김성울	김희정
황광석	김진중	신선호	이현대	한경이	김중호	백재봉	장종국	(주)부산은행	김남일	김쌍우	김진필(2)	박국순	배혜래	신경근	염세원	이남기	이정남	장해욱	정진교	천정호	황보승희	김수근	남상진
황귀선	김창근	신창호	이현숙	한기평	김창세	서이채	전종국	강경태	김대래	김영길	김진현(2)	박남희	배화숙	신군재	오병루	이남중	이정민	장희정	정창성	천현수	황영식	김수정	노금희
황병일	김창숙	신현진	이형복	한성림	김태중	손미란	전철균	강규성	김대중	김영신	김창희	박도영	백대영	신대량	오상준	이덕식	이정식	전보익	정창화	최규덕(2)	황영재	김순복	동병희
황영철	김춘길	신희권	이화영	한성숙	김태현	송미승	전철영	강대영	김도	김영욱	김철도	박동범	백평호	신동욱	오상환	이동률	이정주	전세표	정춘희	최달중	황인구	김순봉	리양일
황정현	김홍신	신희영	임윤택	한화교	김관조	송영중	정남준	강미라	김동명	김영욱(2)	김춘덕	박명식	부두봉	신동윤	오세룡	이동윤	이정항	전용배	정치금	최달중		김승길	문제용
황중숙	김태연	심영주	장복수	황의달	김하성	송진호	정명오	강민석	김동호	김영중	김태경	박미순	부산도시가스	신만석	오연석	이동일	이정호(2)	전우철	정래영	최민식	속초경실련	김승숙	민현정
	김태현	안경래	장인성	황재익	김홍석	송홍범	정삼수	강민수(2)	김명석	김영주	김태구	박미영	서경국	신병훈	오지영	이동진	이정환	전일수	정태호	최병근	(주)강원으로	김시형	박경심
대전경실련	김태형	안병진	정중순	황해정	김희환	송희진	정승임	강민정	김명섭	김영호	김태우(2)	박민우	서경숙	신상구	오철조	이동환	이제훈(2)	전정호	정하윤	최보규	강동우	김연미	박경자
(주)동그랑	김태훈	안재준	정화식	명근홍	신재범	정진대	강병호	김미경	김용원	김학진		박복용	서미화	신영호	육성애	이동희	이조경	전찬일	정해균	최선아	김미식	김영석	박계화



박근철	안세준	이상호	정원호	홍명관	김영태	박재현	유제상	임용순	허현태	정은희	김제동	석진성	이주옥	양평경실련	박수형	이상건	하보균	오승석	권영훈	김순업	마상호	박태문	안봉섭
박덕희	안종석	이수영	정은희	홍인숙	김완동	박준배	윤귀현	임혜경	홍영호	정재현	김종길	설정순	이창수		박순영	이수진	허여령	윤주현	권오섭	김연희	마석홍	박형국	안신실
박만용	안종원	이승재	정은희	홍전희	김용석	박진소	윤두천	장영옥	홍종수	주지은	김종일	성준모	이천환	강대우	박옥경	이승용	허윤희	이문식	권오주	김영근	마석홍	박홍재	안재영
박명중	양언석	이언우	정진용	홍천동	김용일	박태경	윤미경	장성근	황경희	한지은	김지영	송기범	이혜나(하용녀)	강병국	박은정	이연호	홍성원	이식	권진형	김영자	마세진	배경희	안정민
박병훈	양영희	이열호	정홍기	홍해용	김용철	박현웅	윤희경	장점숙	황민석	홍상우	김지훈	신남균	이희대	강신우	박장수	이연환	홍성현	이원두	권혁봉	김영자	마애진	배정수	안창호
박상준	양진옥	이영선	조광덕	황보해용	김용	박형순	이경섭	장점오	황성우	황금영	김창모	신동국	이희연	강원정	박태원	이용성	홍승희	이유형	권혁왕	김영준	목영실	배종열	안철한
박성진	양해준	이영수	조명수	황시영	김은하	박화진	이경환	장현주	황용원	황의병	김창하	신병철	임명자	곽영규	박현일	이의협	황규영	이정희	금청하	김영춘	문미자	변영구	양정분
박성한	어주하	이영순	조성열	황영필	김인석	박홍덕	이국희	정계화	황지숙	황인용(신경과의원)	김철환	신윤관	임현규	구민진	방민경	이자형	황순찬	이종원	기보중	김예론	문승욱	변정해	양희진
박세찬	엄경선	이우영	조현국	황은숙	김재기	배창수	이금희	정수진			김초환	신장환	장동근	권수연	배만병	이정림	황영미	이철	김 준	김옥자	문연래	변정해	어덕경
박수경	엄천수	이문연	주대하		김재성	백승유	이길영	정순혜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김춘호	신청하	장동일	권오병	배연정	이지연	황현주	이평호	김강산	김광근	민승례	부태길	엄기홍
박승민	엄태영	이은희	주영래	수원경실련	김정옥	백혜련	이명옥	정양훈			김태훈	삼규호	장미진	김경수	서동일	이지은	임호상	김경건	김용섭	박경룡	변종진	엄태희	
박영덕	오광택	이인숙	주용현		김종석	변수정	이민구	정연규	(주)세명기전	강경호	김해만	양근서	정명숙	김경희	서시은	이철규	여수경실련	장준배	김경률	김용태	박경미	변종진	엄희용
박영희	오모현	이재선	진장수	(주)해양건설 - 최영옥	김종선	변영선	이범주	정원제	(주)파루	강기성	김현삼	양태호	정세진	김광윤	서진숙	임다정		정대훈	김경림	김우재	박기환	사단법인에이트참임	여재혁
박웅기	오승택	이재정	진형배	김미경	김종오	서경희	이병홍	정자홍	강성민	강수문	김현호	양현석	정승현	김대우	성종규	임승기	강규호	정승환	김경중	김은경	박영순	서성원	여현수
박정민	오윤택	이재홍	천성미	강민철	김종학(주)한국사사무소	서상범	이상명	정종훈	강철호	강수진	김형욱	오관영	정안철	김덕현	송영원	장승희	강미성	정정식	김경화	김용제	박영철	서원교	오근철
박종갑	오홍필	이중섭	천성필	강규정	김준혁	서수정	이상해	정태정	김미정	경삼수	김혜숙	오남숙	정연주	김동운	송요찬	장영달	강성훈	정주현	김광수	김은이	박병건	서은숙	오명환
박종학	원은주	이중식	최관식	강인선	김지란	서정근	이성호	조경두	김선명	경창수	김혜영	오은석	정용기	김동현	송진원	장은혜	강용원	정차섭	김광수	김은하	박병대	서재호	오병재
박중현	유성봉	이중식	최근석	강학천	김진한	서정옥	이성희	조규만	김성숙	고관	김호득	오정순	정은수	김명주	신민희	전미옥	고용국	정치훈	김광식	김익섭	박상욱	서정순	오석호
박중훈	유영민	이주연	최길순	강희정	김종관	서환	이수행	조병모	김성준	고미나	김화궁	오진호	정은식	김영해	신순봉	전승희	공성식	제성명	김광인	김인기	박상용	서희숙	오성순
박준범	유영창	이중길	최돈환	강희진	김태선	서홍석	이승호	조석환	김완우	고영인	나정숙	오현주	정은혜	김영희	신승한	전재은	권욱	제윤경	김금녀	김재순	박상임	성주영	오성용
박희식	유종완	이진여	최동권	고기준	김태학	성기원	이영인	조승백	김중선	곽태영	남정애	오현주	정이진	김민섭	신정원	전종덕	권진구	주춘	김기열	김재홍	박상철	송경은	오형선
반영덕	유주희	이진형	최동훈	고병익	김혜영	성현구	이영주	조영춘	김중욱	곽태영	남정애	왕은희	정정순	김민정	신희정	전종덕	권진구	주춘	김기열	김재홍	박선규	송미정	우근배
방대식	유혜정	이철	최서호	구본숙	김현구	손혜정	이용호	조형훈	김준호	권태근	도원중	원미정	정주호	김선자	안경모	정경숙	김동식	천상국	김기은	김정범	박선규	송미정	우근배
변성수	윤광훈	이태열	최성주	권후남	김현태	송원찬	이운창	주영훈	김지훈	김경숙	류영숙	윤상민	정진욱	김수은	안영일	정남선	김동채	한병세	김기태	김정수	박선영	송영득	우순애
변인미	윤규식	이필선	최승명	김경수	김혜련	신경환	이원욱	진승주	김태호	김경애	맹정임	윤성웅	정철욱	김양수	안은경	정연준	김미소	한옥희	김길홍	김정천	박성희	송영득	우순희
서영기	윤기순	이필선	최애리	김경호	김혜숙	신동섭	이원재	최문태	김현덕	김기범	문강섭	이갑순	제종길	김연호	안정희	정영수	김성춘	한해광	김대록	김종복	박수자	송은주	우종만
서은진	윤신남	이현녀	최영미	김기한	김효근	신지훈	이의봉	최석환	나창수	김기희	문버들	이강숙	조경래	김영선	여병찬	정주영	김숙자	홍춘식	김대축	김종원	박양래	송이식	우현녀
석명환	윤재훈	이현미	최용석	김도형	김훈	신한미	이재득	최영숙	매일식품(주)	김대일	문연숙	이경란	조안호	김영환	여현정	정하성	김영표		김두환	김진영	박옥선	송정호	원경희
선영복	윤재희	이호석	최유정	김동선	나민수	심재광	이정원	최인수	박재현	김동인	박경용	이경석	조재기	김용란	염총	조경승	김유성	이천여주경실련	김미혜	김진용	박인	송준규	원용식
소문섭	윤정은	임정길	최종현	김동원	나태성	심현자	이정하	최인자	박철우	김명연	박경중	이경진	조충현	김일구	오경아	조소연	김정선		김병기	김진창	박인오	송창신	원종수
손병섭	윤준	임종희	최지문	김말순	남택진	안혜영	이종령	최진학	비손이앤씨	김명희	박경태	이근미	주만수	김주남	오성탁	조재국	김종구	강경묘	김병수	김창균	박일엽	신계영	원종순
손재복	이건욱	장경민	최진철	김미선	노종용	양우혁	이종만	최진환	서용현	김민	박금자	이미숙	최경숙	김주원	유기용	조춘선	김현태	강석림	김봉덕	김창수	박재선	신덕선	유경윤
송경희	이검호	장명석	최춘파	김미옥	명홍진	양재철	이종주	최찬호	송경식	김병재	박기욱	이민근	최복수	김지혜	유영표	조항욱	나형선	강신욱	김상실	김춘자	박재우	신동신	유상열
송제철	이경상	장봉주	최택수	김미정	모성은	양진하	이주연	허만호	순천농업협동조합	김복희	박동신	이벽희	최영화	김진영	윤덕규	조현주	박병규	강영애	김선우	김태진	박전희	신동윤	유상희
송종철	이경애	장성원	최형덕	김민수	문순심	염규용	이주현	하순진	오정록	김상혁	박상호	이병욱	최운	김창현	윤수영	조효미	박성현	강정순	김선일	김학경	박전희	신동천	유승열
신대섭	이관	장은선	최혜경	김민수	민경록	예인기	이진성	하은미	위미영	김석용	박성진	이상현	최임이	김햇님	윤종대	채 현	배선주	고경애	김선희	김학재	박정하	신두임	유영숙
신선익	이기원	장재수	최효섭	김백규	박관우	오동석	이찬용	하창호	이금호	김성봉	박승렬	이숙경	최재림	김현진	윤형로	채몽дук	삼남석유화학(주)	고옥자	김성국	김현미	박종구	신원재	유재춘
신재민	이대복	장주열	통일동계공업사 고성관	김석규	박승원	오세환	이창진	한곡지	이상휘	김세원	박정희	이숙란	최현수	김후승	이광자	천귀선	삼남한사랑봉사단	고윤지	김성국	김현숙	박종오	신은순	유학선
신종출	이든섭	전용성	한살림	김석진,자문	박완기	오완석	이판수	한상율	이욱기	김승철	박종호	이양주	하혜경	나진석	이그루	최갑주	서영남	고인정	김성길	김형식	박종욱	신종욱	유혜란
신창승	이문규	전이령	한상민	김성연	박용환	오일용	이필근	한옥자	이종철	김영림	박준연	이욱례	한미현	노국환	이길한	최두영	서진호	공미선	김성애	김호열	박준모	신종욱	윤광석
신현식	이문성	정문교	한성희	김시영	박원호	오지현	이필근, 신	한창균	이천오	김영숙	박태순	이욱희	한수연	류호웅	이대형	최석운	서호영	구경혜	김성완	김홍태	박진형	신철승	윤남선
신홍사	이문영	정봉재	한성숙	김안식	박윤환	오해경	이해균	한창석	임승규	김영애	박해부	이웅진	현유경	박기두	이동연	최소영	송승하	권광일	김세동	남용대	박창근	심관보	윤미애
심삼옥	이미경	정상철	함국기	김영기	박익중	우양미	이현미	한풍교	임종재내과의원	김영희	박희경	이웅천	형천호	박민기	이동준	최영식	심경택	권광일	김세동	남용대	박창근	심관보	윤미애
심연홍	이병선	정순희	함준식	김영기	박재관	유상철	이현순	허성균	장동식	김윤재	백영국	이정미	홍경남	박민정	이명규	최영준	심재수	권순원	김수동	노필원	박창근	심규대	윤수영
심화섭	이봉진	정양언	허우린	김영래	박재순	유상태	이희수	허윤범	정문석	김은주	서정열	이정민	홍장표	박석두	이미순	최창규	안성용	권영미	김숙현	류성민	박창렬	심현모	윤수영
안경수	이상정	정용주	홍련암	김영수	박정화	유재성	이희숙	허재구	정순관	김정란	서혜경	이정아	황연화	박수경	이병은	추은경	오경섭	권영진	김순업	류시근	박태문	안병운	윤준호



윤태범	이용연	임철재	조택선	한만준	(주)장금상선	김동호	김중호	박진석	배인보우인터내셔널(주)	이병철	인천북항2동직부(주)	조병혁	허주형	심동희	최중렬	고영수	박재완	홍성화	류지현	이선열	현선욱	김경애	김성중		
윤태범	이우정	임현권	조택선	한소택	(주)진영(엔지-최춘옥)	김두영	김종화	박창화	안동찬	이상동	인천북항2동직부(주)	조영희	허창희	안수현	최진희	고영식	박정은	맹창호	이수현	홍영종	김경자	김성천			
윤항숙	이운용	임학빈	조한영	한영순	(주)한성라인	김명석	김준우	박태선	안병준	이상영	인천서인천역개발센터	조용철	홍옥표	안정훈	한상호	고정훈	변성언	천안아산건설	명진아	이순곤	황천헌	김경자	김성호		
윤혜숙	이윤숙	장교환	주상운	한영옥	SK인천석유화학(주)	김민배	김진영	박판순	안재균	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조용화	홍인성	양영희	홍순필	고태식	변정철	황병해	고행곤	부상원	(주)아라리오	박민숙	이원자	김계옥	김승일
윤희태	이은자	장여진	주상운	한은상	강경하	김병우	김진희	박한정	안희섭	이상훈	인천항발전협의회	조원민	황덕성	엄상섭	김강문	부상삼	(주)인천동일(주)서비스센터	박복연	이점순	청주경실련	김관식	김수열			
은종원	이의성	장영란	지소연	한은상	강덕우	김병철	김칭우	박홍열	양광범	이상한	인천항운노동조합	조자영	황덕성	오상현	정음경실련	김경용	부인신	강민숙	박상연	이종욱	김광남	김수환			
이강문	이익재	장왕영	지정철	한재수	강명선	김봉수	김태호	박홍철	양희석	이순민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현경	황석광	오영근	김관식	송대영	강용봉	박성호	이종필	(주)남양양도(주)인화인화	김광렬	김수환			
이강수	이재범	장원섭	지효숙	한정민	강명수	김상길	김태훈	방광설	엄연주	이매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준	황수연	유창엽	강창조	김광섭	송석언	강은선	박수석	이종호	(주)세일	김광복	김숙자		
이경수	이재용	장원주	진선중	한정현	강상곤	김상섭	김하운	방수환	여승철	이연숙	임강민	지영일	황용선	윤영수	고남용	김기훈	송승호	강인영	박종갑	이철호	강대성	김광성	김순구		
이경호	이정길	전상진	차동환	한준호	강석철	김선홍	김희연	배성수	오광민	이용준	임승관	지용택	황은우	윤철웅	김용철	김남혁	신용현	강태윤	박종복	이현정	강민오	김광직	김순영		
이경화	이정숙	전성호	차준은	한준희	강옥엽	김설	나영우	배승휘	오승한	이용철	임준택	진인주	황제우	윤태영	김은정	김동욱	신종은	강희두	박종선	일동제약(주)	강병용	김광희	김승효		
이광석	이정형	전영석	채봉수	한희자	강정호	김성근	나종팔	배철현	오원선	이윤성	임채훈	진혁화	은영주	김을수	김동진	안영철	고영술	박태서	임승안	강병호	김교선	김애영			
이광세	이종승	전영애	채홍철	함연자	강진수	김성수	나종훈	백동수	우련동운(주)	이은정	임현준	차광열	전주경실련	은응우	김택술	김동훈	양문석	구분영	박현희	장경식	강석형	김규설	김양식		
이광윤	이종원	정병관	천기영	함연자	강태경	김성태	남봉현	백민섭	유동현	이의재	임희숙	차광윤	이민호	김현	김명준	양봉석	구자형	백우현	장기수	강성래	김규원	김연식			
이광재	이종한	정선욱	천병기	허림	고덕봉	김수자	남세종	범아검수(주)	유재진	이일희	임희진	차동열	강원균	이보향	박래수	김봉석	양성주	금명기	보령제약	장영수	강성호	김기영	김영근		
이광호	이주운	정성기	천재영	허범석	고동희	김승남	남종희	변성준	유진성	이재학	장경동 회장	최경훈	강창수	이승현	송민수	김봉희	양우선	김기태	부광약품(주)	장재식	강은희	김남진	김영란		
이기훈	이준호	정소현	최근우	허수행	고려고속웨리(주)	김승진	남지승	변태수	유필우	이재훈	장영현	최광용	강호수	이영식	유사현	김부찬	오승용	김길년	송용완	전소례	강진성	김대광	김영미		
이길수	이종재	정승수	최대규	허임범	고재성	김승희	남창섭	봉성범	유홍성	이정림	장일진	최광은	곽이구	이정춘	이광호	김식	오영익	김명호	송홍석	전오진	강현구	김대중	김영민		
이길윤	이진관	정용희	최동규	허임범	고정규	김시철	남홍우	사단법인 인천북항운동조합	윤관옥	이정욱	장정민	최금행	국승철	이재운	이상길	김석범	오영환	김미경	신동현	전종한	강호문	김동암	김영배		
이길윤	이진혁	정욱형	최명섭	허준환	고태성	김연옥	노국진	사단법인 한중개발(주)	윤대기	이정윤	전동춘	최두영	권미경	이점수	이상실	김선호	오정훈	김미수	신영철	정미영	강호승	김동욱	김영식		
이대현	이찬우	정우리	최병주	현주섭	공규현	김연옥	노승환	사단법인무지개	윤동규	이종엽	전영우	최병길	김만식	이정	임영관	김성수	오창현	김봉미	안주형	정병용	경준용	김동일	김영재		
이명신	이창규	정윤지	최병탁	홍경아	곽안나	김영구	도영운수(주)	서경옥	윤명철	이종일	전영진	최상희	김병석	이주현	김성준	유덕현	김상관	일본전코리아 주식회사	정병인	고금순	김동진	김영준			
이미희	이창수	정윤희	최복순	홍성동	구자길	김영국	도지성	서광춘	윤미경	이주영	전용성	최성원	김성주	이현희	김세검	유두석	김상철	양경모	정성진	고영구	김동형	김영진			
이박우	이창수	정은영	최상동	홍원표	권경자	김영수	류병희	서부길	윤미선	이주용	전우진	최성진	김수태	임규삼	김수남	윤준식	김성현	양소조	정재교	고영재	김두호	김영태			
이백선	이천수	정은희	최상원	홍은하	권남구	김영옥	류제홍	서용성	윤월성	이준한	전준권	최인용	김수환	임성진	강경희	김수연	이성호	김세곤	오수균	정치화	공공디자인이즘	김말숙	김영환		
이복수	이철희	정인우	최유명	홍종민	권대현	김영준	명선목	서주선	윤지의	이진준	정기호	최정자	김용권	장석재	강봉석	김승필	이숙희	김연	오승화	정하진	곽규은	김명배	김영환		
이부경	이춘석	정일규	최용철	황경애	권미정	김옥산	명창준	서태원	윤호	이찬우	정낙식	최정철	김용휘	전기환	강승환	김승훈	이용민	김용진	오인철	조강석	곽나현	김명수	김영희		
이상년	이충일	정정순	최은실	황규문	권오경	김용구	목동훈	서해안	윤희정	이창숙	정두용	최준혁	김장기	정구영	강인창	김양보	임숙자	김종문	우승윤	조미경	곽덕신	김명자	김원희		
이상원	이충환	정진학	최인근	황규문	권오연	김용모	문상범	선광종합물류(주)	윤희택	이창운	정미경	최진용	김정길	정상중	강지용	김영희	임정현	김종우	유영길	조성아	곽승호	김문옥	김용규		
이상태	이판용	정춘화	최인식	황인동	권용희	김용미	민근홍	성기건	이강신	이창훈	정석조	최찬용	김종원	정세운	강창균	김용범	장원석	김종훈	유유희	조영주	구남휘	김미라	김용덕		
이상혁	이학수	정하근	최재화	황인재	권정호	김용민	민동식	성덕규	이강훈	이철준	정석환	최현	김주희	정태원	강창식	김우준	정상철	김진국	유진영	조하심	구안서	김미숙	김용덕		
이석환	이한표	제영기	최정관	황진선	김갑봉	김우경	박경호	성용원	이경우	이한용	정선오	최해자	김혁수	조선환	강태운	김원규	조문수	김진태	유한양행	주진혁	권경미	김미숙	김용석		
이선	이해철	조경국	최정숙	황현숙	김경언	김원화	박상찬	손병옥	이광승	이해우	정승연	이도희	이행숙	이행숙	정승용	김익대	주식회사 삼성특판	김철수	윤권중	주흥중	권기승	김미현	김용태		
이선정	이현호	조계만	최정화	김경원	김윤태	박상희	손장원	이귀복	이행숙	정승용	김익대	이성규	이현희	조길문	최종	인천경실련	김경태	김은경	박석민	송경희	이기태	이현경	정연중		
이성규	이현희	조길문	최종	인천경실련	김경태	김은경	박석민	송경희	이기태	이현경	정연중														
이성훈	이호영	조남술	최종	김경호	김은영	박성민	송문성	이길성	이현석	정원경															
이순창	이호일	조병돈	최종악	(사)공정무역인천광장	김계원	김은환	박수영	송원덕	이다빈	이현준	정은식														
이승남	이훈	조생남	최춘봉	(사)인천인본인클럽	김관호	김용철	박순옥	송인선	이덕환	이형구	정재영														
이승현	이희상	조성복	최현희	(주)경인방송	김광업	김의식	박시우	시사인천	이도희	이형수	정재윤														
이양순	임명원	조용필	하명수	(주)동우로지스	김광호	김인수	박옥희	신나영	이동기	이화희	정지은														
이영우	임선미	조은미	하태길	(주)디씨알이	김근영	김재경	박용해	신병철	이동현	이후삼	정진수														
이영현	임성규	조경래	하현홍	(주)디에스메탈	김기한	김재식	박윤수	신영은	이루다	이홍우	정진오														
이영훈	임성식	조정숙	한국전력	(주)선광	김남돈	김재영	박재윤	신은철	이린우	이희수	정창훈														
이옥희	임승한	조종성	한덕이	(주)영진공사	김대중	김재욱	박정남	신중환	이문의	인성개발(주)	정희윤														
이용근	임은혁	조철현	한덕이	(주)인천도선	김동완	김종길	박종석	신현수	이범열	인천광역시도시개발청	조광희														
이용만	임철만	조춘순	한돈집	(주)인천일보	김동우	김중욱	박준용	심정순	이병기	인천문화재단	조동암														

인천경실련

2017년 7. 8월호



김일경	김호숙	맹석주	박종혁	선지연	신현규	오종영	윤한식	이수복	이중현	임희영	정일택
김재복	김호일	맹현숙	박지영	설경철	신현식	오준영	윤현우	이수영	이중훈	장경석	정장영
김재숙	김홍구	명정희	박진우	성기남	신희숙	오창민	윤혜정	이수한	이지숙	장남운	정재량
김재원	김홍성	문성오	박찬규	성창기	심규석	오태경	윤희영	이순남	이지영	장동대	정준영
김재종	김한국	문종국	박창호	성환용	심삼학	오태진	이기빈	이순호	이지영	장병순	정지성
김재춘	김황래	문화창	박철규	소순창	심수영	오훈영	이건철	이순희	이찬호	장병희	정지영
김재학	김효일	민경역	박철석	손세원	심영미	오희	이경수	이승배	이창수	장선배	정진아
김정문	김희수	민광기	박철완	손윤희	심진행	우상동	이경순	이승준	이철중	장영건	정진원
김정승	김희숙	민선희	박춘섭	손정훈	씨투넷(주)	우장영	이광식	이양우	이철희	장재봉	정진하
김정웅	김희식	민승기	박헌순	손호진	안병대	우정순	이광용	이연옥	이학철	장호진	정찬영
김정일	나영구	민청식	박형배	손희준	안영숙	원광희	이광희	이영로	이한례	장홍원	정철
김정초	나재경	박경수	박호표	송봉화	안장현	유경훈	이귀숙	이영숙	이한훈	전광호	정충선
김종구	남기상	박관주	박희분	송선호	안종태	유광식	이귀형	이영진	이해승	전금식	정대진
김종기	남대우	박광수	반영운	송은숙	안창만	유국렬	이규선	이영희	이향숙	전길자	정해영
김종철	남성옥	박기환	반주현	송의천	안태희	유근수	이규호	이옥인	이현수	전년규	정현순
김종태	남성옥	박남순	배병기	송일근	양계인	유미숙	이기정	이유정	이현수	전동기	정회승
김종태	남윤빈	박영규	배상은	송재경	양기정	유민상	이길재	이윤범	이현식	전병선	조경주
김주복	남준순	박문희	배은환	송재봉	양기춘	유선우	이길환	이인구	이현주	전세식	조경주
김준경	네모토 마사쓰구	박미애	백미경	송종찬	양미선	유성훈	이대응	이인우	이형우	전용렬	조규완
김준기	노근호	박미영	백승협	송태성	양승구	유순영	이동로	이일만	이혜정	전용표	조규호
김준년	노만균	박민수	법무법인 주성	송태화	양원철	유승덕	이두영	이일우	이호상	전우석	조동순
김준수	노재량	박민수	변광섭	송해근	양찬섭	유시송	이만형	이장희	이홍열	전지현	조동욱
김준태	노진호	박병혁	변만수	송효현	염경출	유영경	이만희	이재덕	이화련	전창해	조상현
김지연	대신정기화물	박석현	변민수	신경아	에듀크리안트	유영숙	이맹원	이재영	이효숙	전희택	조성구
김진철	자동차(주)	박성순	변상태	신경운	연규순	유영아	이명순	이재영	임간철	정길재	조성수
김창석	도경민	박성호	변상호	신국희	연규용	유옥순	이명호	이재원	임근수	정란희	조성오
김천식	도선봉	박세웅	변성민	신규식	연방희	유응모	이명훈	이재원	임기중	정미화	조수중
김철	도승기	박연수	변은영	신동선	연영규	유재일	이미선	이재은	임동현	정병숙	조승연
김춘희	두깨비살림영농조합	박영미	변의수	신동예	연영태	유주하	이미순	이재춘	임미애	정상섭	조영화
김태성	디자인포커스	박영미	변장섭	신동호	연인하	유철호	이민영	이정규	임병락	정상신	조용숙
김태성	라윤애	박영숙	변종윤	신명섭	연준	유행열	이범구	이정석	임병원	정상옥	조원주
김태준	류규식	박영순	봉원진	신명수	연철흠	유현덕	이범석	이정수	임성진	정상완	조윤행
김태희	류근모	박용석	봉윤근	신명숙	연호석	유환철	이병관	이정아	임성총	정성래	조은애
김평환	류근윤	박용연	서간석	신명자	염우	육미선	이병호	이정협	임승빈	정성희	조울선
김필제	류덕환	박은경	서길웅	신범식	오경아	육종길	이복순	이종섭	임용수	정수창	조이현
김학구	류연옥	박익규	서대석	신성일	오국진	윤건영	이상규	이종수	임용현	정순배	조일원
김학균	류용길	박인숙	서미화	신승수	오명진	윤관수	이상근	이종실	임은정	정승희	조정식
김학민	류우열	박인자	서연숙	신승주	오미정	윤기희	이상복	이종원	임일수	정연경	조종호
김학실	류재욱	박재경	서완석	신영구	오병건	윤미정	이상식	이종윤	임재경	정연주	조항전
김한솔	류재형	박재관	서용원	신영창	오상록	윤병희	이상중	이종한	임재규	정영래	조형규
김한태	류지봉	박재익	서우석	신영희	오석송	윤상이	이석구	이주봉	임중승	정영섭	조혜경
김현상	류진호	박정환	서울고속(주)	신윤희	오세란	윤석위	이석희	이주선	임지민	정영희	주서택
김현주	류찬걸	박종관	서준철	신용재	오연경	윤승현	이선미	이주형	임차남	정우영	주혜사 배경리내이엔
김현진	류학천	박종국	서효석	신철영	오영미	윤정수	이선순	이준수	임한빈	정은경	주재구
김형규	류현숙	박종룡	석명용	신태경	오영애	윤진현	이선우	이준희	임한수	정은희	주재현
김형우	리드산업개발(주)	박종선	석준	신필희	오영필	윤찬열	이선희	이준섭	임현경	정인수	주창백
김형창	마재광	박종을	선종열	신해운	오제세	윤태한	이성민	이종원	임혜숙	정일기	지동규

자유석	최상범	최종익	한수환	홍강희	황희연	김진상	방명열	윤준형	이인섭	조성모
차은녀	최상영	최진욱	한승환	홍석원		김찬중	방수미	유재원	이종민	조성자
차인용	최상희	최진완	한영선	홍성학	춘천경실련	김평안	방수진	윤장혁	이택수	진장철
차태영	최성희	최충진	한원영	홍성학		김한택	변용환	윤재경	이희창	최희수
채희관	최영중	최태호	한은례	홍승표		남수희	변자용	윤재선	임재선	춘천상공회의소
창녕대학교병원	최우식	최현숙	한인섭	홍우표		권용범	남형우	변지량	윤진현	전규호
창주산업디자인리공단	최은침	최희도	한정현	홍응표		김정숙	박경철	석영기	윤학로	전근우
창생광공업대학교	최원호	최호균	함명옥	황경수		김광배	박대진	손헌기	이관행	전만식
창생광공업대학교	최윤정	표한홍	함중철	황규혁		김남철	박도수	손흥주	이복연	전성휘
창주생안갑상가상인회	최은실	풍경섭	허석렬	황락훈		김대영	박동운	송창근	이상섭	전양호
창주생안갑상가상인회	최재수	허옥란	허성만	황미화		김석중	박미현	신선철	이상철	전운성
	최각규	최재일	허재성	허영		황선건	김선배	박상규	신정미	이석원
	최경호	최정호	하태중	현상주		황성주	김영준	박상렬	신혜숙	이승준
	최광민	최종문	한범덕	현진		황영미	김용식	박정근	안호춘	이원규
	최명섭	최종예	한상화	형미희		황중빈	김정현	박형일	양태식	이은영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02-741-8566	윤순철	부동산국책감시팀	02-3673-2146	국장: 김성달, 부장: 최승섭
기획교육팀	02-766-5626	국장: 김한기, 간사: 오세형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4	국장: 권오인
회원홍보팀	02-766-5627	부장: 채준하, 간사: 윤은주	(사)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국장: 김삼수, 간사: 조성훈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장: 권오인, 간사: 최예지, 정택수, 이성운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국장: 남은경, 간사: 김정훈
정치사법팀	02-3673-2141	국장: 김삼수, 간사: 유애지, 허재필	시민권익센터	02-766-5624	간사: 권태환
사회정책팀	02-3673-2145	간사: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국장: 윤철한
국제팀	02-766-5623	간사: 정호철	월간 경실련	02-766-5626	이사: 윤유정, 김용재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충청권		
광역시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간사: 이수희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김동현, 부장: 박수민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유영아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국장: 최은영, 간사: 박은영	경상권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부장: 서해립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이양식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이훈진, 부장: 윤정선, 팀장: 배성훈	경주경실련	054-773-7851	간사: 왕서정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송원, 부장: 김성아, 팀장: 이경진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경기·강원권			전라·제주권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장홍영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부장: 최미영	여수경실련	061-643-2110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오은정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김창모
수원경실련	031-253-2266	처장: 노건형, 부장: 유병욱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간사: 고동우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김은정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추상윤, 간사: 변정혜	제주경실련	064-726-2530	간사: 김신숙
양평경실련	031-772-2091	국장: 여현정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한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경아			
춘천경실련	033-636-6631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백태수니

여름이 100년 전보다 30일이나 늘어났대요.

그만큼 겨울도 30일이나 줄어들었대요.

'여름이 길어질 것 같아'라는 제 생각이, 그제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이번 여름 더위가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상제, 여름이 극사위지는 때가 오네요.

겨울, 어떻게 하면 다시 늘려 수 있을까요.

